

인권정보자료실  
ESel.33

#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水の私有化と労組の対応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アジア 社会・民衆運動會議

**Water Privatisation and the Response of Trade Unions**

Asian Social and Peoples' Movements Assembly

2004년 6월 14일 / 2004年 6月 14日

14th June, 2004

고려대학교 서관 401강의실 / 高麗大學校 西館 401講義室

Korea University West Hall 401

ESel.33

#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水の私有化と労組の対応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アジア 社會・民衆運動會議

**Water Privatisation and the Response of Trade Unions**

Asian Social and Peoples' Movements Assembly

2004년 6월 14일 / 2004年 6月 14日

14th June, 2004

고려대학교 서관 401강의실 / 高麗大學校 西館 401講義室

Korea University West Hall 401



- 목 차 / 目 次 / CONTENTS -

워크숍 순서

발제문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  
· 이원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 11  
수도비전에 대한 젠스이도(全水道)의 의견 ... 16  
·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17  
·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 23  
· 송유나,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 

워크숍 순서

發題文

- 韓國の上水道の民營化推進の現況と問題点 ... 31  
· 李元休, 全國公務員勞動組合 民營化阻止特別委員會 委員長
  - 日本における水道制度の現況と課題 ... 36  
水道ビジョンに對する「全水道意見」... 42  
· 水越 隆, 全日本水道勞動組合 書記次長
  - 水私有化の社會的意味と影響 ... 43  
· キム・ナツチュ, 環境運動聯合 綠色代案局 幹事
  - 公共部門の私有化阻止闘争、その意味と課題 ... 48  
· ソン・ユナ, 社會進歩連帶 諮問委員
- 

Workshop Programme

Presentation Documents

- The Privatisation of the Water System and Its Problems ... 55  
· LEE Won-Hyoo, Chairperson of Anti-Privatisation Committee, KGEU
- Water System in Japan and the Tasks ...  
ZENSUIDO's Opinion on Water Vision ...  
·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 The Social Significance and Impact of Privatisation of Water ... 62  
· KIM Nak-Joong, Coordinator of Green Alternatives Unit, KFEM
- The Struggle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 69  
· SONG Yoo-Nah, Adviso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워크숍 순서>

##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o 개막

환영 및 소개

- 개회사

·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o 발제 I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이원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 미즈코시 타카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 o 발제 II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 송유나,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 초국적 자본과 물 사유화

· 킹숙 다타, 인디아노동조합총연맹

### o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o 폐막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워크ショップ 順序>

## 水の私有化と労組の対応

### o 開幕

歓迎と紹介

- 開會辭

· 金永佶, 全國公務員労働組合 委員長

· 水越 隆, 全日本水道労働組合 書記次長

### o 發題 I

- 韓國の上水道の民營化推進の現況と問題点

· 李元休, 全國公務員労働組合 民營化阻止特別委員會 委員長

- 日本における水道制度の現況と課題

· 水越 隆, 全日本水道労働組合 書記次長

- 水私有化の社會的意味と影響

· キム・ナツチュ, 環境運動聯合 綠色代案局 幹事

### o 發題 II

- 公共部門の私有化阻止闘争、その意味と課題

· ソン・ユナ, 社會進歩連帶 諮問委員

- 超國籍資本と水私有化

· Kingsuk Datta,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 o 質問·應答と綜合 討論

### o 閉幕



<Workshop Programme>

## Water Privatisation and the Response of Trade Unions

### o Opening

Welcome and Introduction

- Opening Remarks :
  - KIM Young-Gil, President, KGEU
  -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 o Presentation I

- The Privatisation of the Water System and Its Problems
  - LEE Won-Hyoo, Chairperson of Anti-Privatisation Committee, KGEU
- Water System in Japan and The Tasks
  - MIZUKOSHI Takashi, Deputy General Secretary, ZENSUIDO
- The Social Significance and Impact of Privatisation of Water
  - KIM Nak-Joong, Coordinator of Green Alternatives Unit, KFEM

### o Presentation II

- The Struggle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 SONG Yoo-Nah, Adviso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Transnational Capital and Water Privatisation
  - Kingsuk Datta,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 o Questions & Answers / General Discussion

### o Closing

##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후

### 1. 들어가는 말

물은 자연에서 취수되어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이용된 후 다시 적절한 처리를 거쳐 자연으로 배출된다. 상수도 사업은 자연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체 수자원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이다.

수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재산권을 전제로 할 때,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물이 지구상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유는 인구폭발, 물소비량의 폭발적 증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 기업영농의 사용증가, 지표수의 오염 등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물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데, 수환경 구성요소별로 보면, 수량관리기능과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과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로는, 건설교통부는 일반하천관리,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용수 수요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수력발전은 산업자원부, 지방상수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하수도사업은 수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하수도사업의 경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이며, 중앙정부 내 소관부처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이다.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은 경영효율성의 부족, 공급측면에서 정수시설의 노후, 용량부족, 수질관리측면에서는 실험실(장비) 미비, 인력 부족, 경영관리의 형식화, 조직·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가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하수도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경영마인드의 부족, 장기경영계획의 부재 또는 부실, 관리자의 하수도 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 정치적인 요소로 사업우선순위에서 배제, 하수관거투자 불균형, 조직·인력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 및 준설원이 과다하고 사업소



인력의 운영이 불합리하며, 수질업무를 담당할 환경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빈번한 인사이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물의 중요성과 관리의 문제점등이 상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의 극복 수단으로 단순히 물의 사유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물부족 현상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물의 사유화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구와 모든 생물중에 속하는 자원인 물을 상품화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물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의 사유화는 상하수도 민영화, 생수판매, 댐건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부족을 해소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물 사유화의 대명제는 세계 곳곳에서 가능할 수 없는 정도의 수도요금인상, 기업이윤에 가려지는 수질의 악화, 무분별한 수자원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낳아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민영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안과 공무원노조의 투쟁 계획 등도 아울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상하수도 일반 현황

가. 지역별 상수도 현황 (1999)

구분	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 (l)	누수율 (%)	생산원가(원/톤)	요금 (원/톤)	인상요인(%)
전국	86.1	388	16.1	535.3	396.9	34.9

나. 경영상태

지방상수도 경영상태는 '99년 부채비율이 33.2%로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고정장기적합율은 93.8%로 고정자산 등예의 투자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인 고정부채나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였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99년 전체적(공기업)으로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흑자단체가 45개, 적자단체가 47개로 단체 간 차이가 크다.

다.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2002)

구분	총인구 (명)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인구(명)	하수도보급률(%)		재정지립도(%)
				처리개소수	관거보급율	
전국	48,518,573	20,233	36,760,736	207	75.8	59.4

라. 하수도 재정별 사업비 및 부채 실태 (1999)

구분	총수입액 (백만원)	재원별 비율 (%)					총부채액 (백만원)
		국고	교부금 양여금	시·도비 시·군비	사용료 수입	원인자 부담금 등	
전국	2,668,799	6.1	19.7	45.6	19.0	9.6	2,055,169

마.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영화 사례

2000년말 현재 총 투자비 36,793억원, 민자유치 가능액 17,504억원을 목표로 전국 68개 하수처리시설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1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82개 시설에 7,133.6톤/일이다. 이는 시설수로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48%, 처리시설 용량 면에서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용량의 38.7%에 해당한다. 민간위탁 운영 처리시설의 인원은 총 7,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3. 민영화 추진 문제점

물의 사유화는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물의 생산과 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영화 결과 수도요금만 폭발적으로 인상시키고 시설은 재투자를 회피하는 경험에서 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기본인 자연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공성(공공재, 자연자원)의 저해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나. 안전성의 저해

환경과 생명의 기본인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 투명성 저해



막대한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다. 편익성 저해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시설투자비용 등을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엄청난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빈곤층에게는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마. 환경오염에 노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책임있게 환경보전 등에 관심을 갖는 선한 기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물은 공동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수질을 감시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4. 상하수도 시설 관리적 측면 대안 제시

공공재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 어렵고 비효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설관리의 효율 등 정부기능을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하는 방안보다는 정부 자체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환경오염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 물관리체계 조정 - 유역통합 관리체계

1) 유역단위 수자원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관리청에 수질수량 관리 기능을 부여하거나 유역단위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계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2) 수계관리기구는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행정관리체제보다 경영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를 수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3) 수계관리기구의 역할은 지역수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수질목표의 설정관리, 지하수를 포함한 물값 징수(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오염원 인자에 대한 부과금 징수, 환경세, 조세 등에 의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시설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등이며, 처리기술의 개발 및 지원 기능도 가능

나. 상하수도사업 체계 조정

1)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수원개발과 취수부분을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수자원 개발과 배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를 평준화하고, 동시에 단일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한다면 각 지역의 원수 취수 비용을 평준화하는 방법

2)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수계를 중심으로 권역별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물 관련 지역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수계 중심의 통합사업조직이 상수의 공급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상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부담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하는 방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 수자원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배출에 대한 비용부담(외부성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3) 궁극적으로는, 수계 중심의 통합된 물사업체계가 하수처리 관련부문까지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걸친 외부효과의 조정 및 물 공급 관련 비용분담을 사업관리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수계에 걸친 상·하수도사업의 통합 형태가 대안

4) 지자체 연합조직 구성방안으로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체계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계에 걸친 상하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이 유리한 지역은 구역을 분할해 상수공급량과 오염처리 총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 시설건설 및 공동운영하는 방안

5.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

물 사유화 저지투쟁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투쟁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아래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 상하수도 위탁관리 저지전선 구축, 마산시 칠서정수장의 저지투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인 물의 사유화 저지 투쟁을 조직

나. 국민투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배치

다. 민간위탁 시설의 지속적인 감사활동 전개

라. 국회와 시의회, 국민 홍보사업 전개

마.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주민소환제 등 적극 활용



<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현황 ('01. 1월 현재)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계		82개소	7,113.6		1,529	
서울시		탄 천	1,100.0	(주)탄천환경	128	2000.4~2002.12
부산시	소 계	5개소	1,295.0		229	
		해운대	65.0	환경관리공단	24	'96.5~2001.7
		남 부	34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55	2000.1~계속
		수 영	55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64	2000.1~계속
		장 립	330.0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78	2000.1~계속
		녹 산	10.0	쌍용건설(주)	8	'99.8~2001.6
대구시	소 계	4개소	1,770.0		206	
		신 천	680.0	환경시설관리공사, 금호산업, 영남건설	62	'99.11~2002.5
		달서천	400.0		57	2000.7~계속
		서 부	520.0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57	
		북 부	170.0		30	
인천시		공 촌	26.0	동아건설, 브니엘수질환경	11	'99.7~2002.7
광주시	소 계	2개소	660.0		85	
		광 주	600.0	환경시설관리공사, 금호건설	67	'98.3~2001.2
		송 대	60.0	"	18	'98.12~2001.2
대전시		대 전	900.0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103	2001.1~
경기도	소 계	27개소	619.4		293	
	평택시	장 당	40.0	성원사업, 울트라환경	19	'98.7~
		통 북	30.0		19	2003.3
		포승공단	40.0		12	2000.1~2002.3
	양평군	서 종	0.9	금호ENG, 유림환경	4	'98.9~
		강 하	3.6		7	2001.9
		용 문	2.6		5	2000.6~
		하지포	0.2		2	2003.6
포천군		포 천	16.0	(주)태영, 포천	15	99.3~2002.2
의왕시		부 곡	10.0	(주)대우건설	13	'99.11~2002.10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기평군 (2)	가 평	6.5	금호ENG, 일진종합건설	9	2000.1~2001.12
		청 평	6.2		12	
	안양시	안 양	300.0	(주)대우건설	41	2000.4~2003.3
	안성시	안성공단	3.0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6	'86.8~
	오산시	오 산	57.0	LG건설	17	2000.4~2000.12
	연천군	연천전곡	12.0	(주)태영	14	2000.4~2002.3
	광주군 (10)	광주읍	25.0	광주지방공사	38	2000.1~2002.12
		매 산	0.5		3	
		만 선	0.15		-	
		광 동	0.25		5	
		분 원	1.9		5	
		귀 여	0.15		-	
		곤지암	20.0		18	
		남한산성	1.2		3	
		도 척	2.0		3	
		삼 성	0.25		-	
	이천시 (2)	이 천	30.0	환경시설관리공사+이천환경	17	2000.8~2003.7
		장호원	10.0	환경시설관리공사+이천환경	6	2000.8~2003.7
강원도	삼척시	삼 척	25.0	환경시설관리공사	19	'99.12~2002.12
충북도	소 계	8개소	52.55		75	
	옥천군 (4)	옥 천	18.0	환경시설관리공사	23	2000.1~2002.12
		동 이	0.21		3	
		안 남	0.16		3	
		안 내	0.18		3	
	진천군	진 천	8.0	환경시설관리공사	11	2000.6~2003.6
	증평군	증 평	15.0	(주)태영, 한라건설, 건양기술공사	14	'99.5~2002.5
	음성군	음 성	7.0	롯데기공, 건양기술공사	10	'99.9~2002.8
	괴산군	괴 산	4.0	건양기술공사+임광토건	8	2000.7~2003.7
충남도	소 계	2개소	45.0		39	
	서산시	서 산	30.0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24	2000.4~2001.4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예산시	예 산	15.0	(주)태영건설	15	2000.7~2003.12
전북도	소 계	3개소	68.0		42	
	고창군	고 창	16.0	(주)대우건설	12	'99.9~2002.8
	김제시	김 제	20.0	롯데기공, (주)대경	14	2000.1~2001.12
	완주군	삼 레	32.0	환경시설관리공사	16	2000.1~2002.11
전남도	소 계	6개소	22.6		33	
	화순군 (3)	화 순	11.0	환경시설관리공사	14	2000.1~2002.12
		화순북면	2.0		2	
		화순도곡	6.0		2	
	보성군 (3)	보 성	3.0	(주)태영+롯데기공	9	2000.6~2003.6
		복 내	0.4	(주)태영+롯데기공	3	
문 덕		0.2	(주)태영+롯데기공	3		
경북도	소 계	5개소	206.0		79	
	김천시	김 천	80.0	(주)태영	23	'99.4~2002.3
	상주시	상 주	26.0	(주)태영, 창일환경	17	'99.12~2002.12
	고령군	고 령	6.0	(주)동신건설	5	2000.9~2005.9
	안동시	안 동	54.0	환경시설관리공사+코오롱건설	22	2001.1~2003.12
	경산시	경 산	40.0	환경시설관리공사+태영	12	2001.1~2003.12
	소 계	16개소	324.05		187	
경남도	양산시	양 산	48.0	환경시설관리, (주)태영	21	'98.11~2001.11
	사천시	삼천포	43.0	(주)한양+(주)우진	20	2000.6~2003.6
	거창군	거 창	10.5	환경시설관리공사	7	2000.4~2003.3
		거창가조	5.0	환경시설관리공사	4	2000.9~2003.3
	김해시 (2)	화 목	114.0	(주)대우건설, 대저토건, 환경시설관리공사	24	2000.2~2000.12
		진 영	12.0	(주)대우건설, 대저토건, 환경시설관리공사	12	2000.4~2000.12

(계속)

시·도	시·군	처 리 장 명	시설용량 (천톤/일)	수탁업체	운영인원 (인)	계약기간
	함안군	가 야	6.8	(주)범한	19	2000.6~2002.5
	함양군	함 양	7.0	환경시설관리공사+(주)건화+파이닉스알앤디	8	2000.7~2003.6
밀양시 (3)	하 남	하 남	4.0	(주)대우건설	4	2000.11~2000.12
	밀 양	밀 양	30.0	(주)대우건설	22	2000.11~2000.12
	삼랑진	삼랑진	4.0	(주)대우건설	4	2000.11~2000.12
창녕군 (3)	부 곡	부 곡	13.0	환경시설관리공사	8	2000.5~2003.7
	창 녕	창 녕	6.0	환경시설관리공사	7	2000.7~2003.4
	남 지	남 지	5.25	환경시설관리공사, 우일환경산업	10	2000.11~2003.11
의령군	의 령	의 령	8.0	환경시설관리공사	8	2000.9~2001.8
하동군	하 동	하 동	7.5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호산업	9	2001.1~2003.12

※ 대전, 안동, 경산, 하동 등 4개소는 2001. 1월에 위탁계약된 처리장임

<표> 행정협의회 현황

구분	권역수	총자치단체수	비고
합계	55	228	
광역행정협의회	5	14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기초행정협의회	50	214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6	합계
협력사업수	11	4	12	22	29	23	30	131

분야별	상수도관리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지역개발	행정기능 등	합계
협력사업수	21	15	21	35	39	131

주체별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지방-민간간	합계
협력사업수	74	4	53	0	131

자료 : 내무부, 행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침



<표>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광역화 수단들

유형	주요내용	주요사례	장·단점
행정 구역 조정	통합	몇 개 군소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정부 구성	(일) 市·町·村 <장점> ① 규모경제실현 ② 외부성 통제 ③ 관료제의 규모경제실현
	합병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근린지역 편입	1990년대초 미/캐나다
	분리	군에서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시·읍의 직할시나 시로 승격	볼티모어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군 통합	시와 군을 통합하여 단일 지방정부 구성	인디애나폴리스 마론 카운티
	특별구	별도구역설정,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특별자치단체	(미) 교육구 (영) 상수도구 (한) 규정 有
자치 단체 간 협력 조정	합의·협정	2개 이상 자치단체가 단일(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정체결	· 상호부조협정 · 시설공유협정 · 사무위탁 · 생산자·소비자 협정
	가능이양	특정업무의 권한을 주로 상위정부에 이양	L.A. County Metropoliaan Miami의 Dade County <장점> ① 기존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구역 확대 가능 ② 규모경제 실현 ③ 외부효과 통제 ④ 자치단체의 본래지위 유지, 공동사무처리 가능 <단점> ① 지방정부간 대등참여의 비현실성 ② 주민대응성 저하 ③ 법적 구속력 미약
전담 기구 설치	연합체	광역사무처리를 위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설치	(개) 토론토 몬트리올
	조합	특별자치단체로 일부업무조합과 복합사무조합 있음	프, 독, 일 (한) 규정 有
	협의회	자치단체간 협력기구로서 집행력은 없음	(한) 광역행정협의회 등
	지방개발 사업단	일정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적 성격의 특별자치단체	일본
	지방공사	중앙·지방정부가 협의·설치하는 지속적인 공공조직	(영) 도시개발공사

자료 : 김봉진, 상수도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팔당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1997, p.22

## 일본의 수도제도의 현상과 과제

전일본수도노동조합  
사무부총장 미즈코시 타카시

### 1. 일본의 근대수도의 역사

일본의 수도는 개국에 따른 전염병 대책(공중위생의 일환)으로 개시되어, 요코하마(横浜), 하코다테(函館) 등의 항만도시에 근대수도의 부설이 시작되었다(1887년).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사업은 시초촌(市町村)경영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1890년). 그러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대도시에서만 수도보급이 추진되었다.

전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점(1947년), 공영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수도사업 등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의 틀(독립채산제도, 기업회계 방식의 도입, 해당 자치체로부터의 장기 자금 차입과 기업채의 발행 등 자금조달 시스템)이 확립된 점(1952년), 신수도법이 제정(1957년) 되어 수도사업의 목적이나 수질기준 등이 명확해진 점 등으로, 일본의 수도보급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재는 약 96%까지 수도보급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수도가 보급되어 있다.

### 2. 일본에서의 수도사업의 현상

일본에는 약 3300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현재, 이 자치단체를 1000곳 정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정부는 시초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2004년 4월 1일 현재 3100곳으로까지 통합이 진행되었다).

수도사업은 시초촌 경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인 사업체가 많다. 일본 전체의 수도사업체 수는 약 10,666곳. 그 중에 공급인구 5,000명 이상인 상수도사업은 약 2,067사업체 정도로 대부분은 공급인구 5,000명 미만의 간이수도로 약 8,599사업체. 사영(私營)수도로는 단지조성 등으로 만들어진 부동산기업 등이 경영하는 극소규모의 민영수도가 약 10사업체 정도 존재한다(일본수도협회 발행 통계자료 2003년판).

### 3. 일본에서의 수도사업의 과제

공업화와 대량생산소비의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로 인해 수도 수원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시설정비)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전후 건설된 수도시설이 노후화하여 갱신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도사업체는 하나같이 시설정비와 시설갱신을 위한 재원과 기술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제도에서는 재정기반도 기술기반도 약한 소규모 수도사업체가 많고, 수도법으로 정해진 '사람이 마시는데 적합한 물'을 장래에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 즉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수도사업경영의 광역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 시초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초손 통합과 수도사업의 통합은 비슷하되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시초손 통합은 정부의 재정우대조치가 통합의 동기이므로 "통합했을 경우에 이득을 보나 손해를 보나"라는 판단이나 "문화나 역사성에 동일성이 있는가, 도로·통신망은 동일한가"라는 문제가 통합의 커다란 요소로 된다. 이에 비해 수도통합의 경우에는 경영문제나 원수(原水)의 수질·수량의 문제가 커다란 요소로 되기 때문에, 수원인 하천유역을 함께 하고 있는가가 통합의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초손 통합과 수도사업통합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초손 통합은 행정서비스의 목표나 수준을 제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절한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 통합의 경우에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근접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통합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수도물의 수질검사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체는 적다. 수질검사를 위한 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공급인구규모로 약 25만명 이상(젠스이도 조사)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에 자주검사체제가 확립돼 있다.

작년까지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검사기관의 지정이 규제완화되어 '시장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 '안전한 공급체제'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통합을 지향할 경우에는 적어도 수도수질검사체제는 '자주검사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공급 규모 30만명 정도를 적정규모로 한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4. 수도사업의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움직임

1) 국제적인 움직임

5월 17~18일에 일본에서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의 워크숍 '효율적 수도경영'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구미의 수도사업 현황은 각국 모두 수도사업에 대한 공적 관여가 엄격하여 소위 '시장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워낙에 구미 여러 나라에서의 수도사업은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으로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에서부터 발전해온 것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영수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미의 수도는 '민영화되어 있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한결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주식의 발행, 집행임원에 의한 경영=민영이라고 해석들을 하지만, 주식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영국처럼 '시장화'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네덜란드처럼 공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식의 소유가 사적이기 때문에 '시장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물관리는 공적 관여가 엄격하고, 운영에서도 '오프 와트' 등이 감시하는 시스템이어서, 물 그 자체가 사적 소유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요금산정에서는 미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도이용자의 부동산가치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서 공평성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더, 기업매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경영의 라이선스도 이동하여 지극히 불안정하다 하겠다. 이미 영국 최대의 물기업인 '템즈워터'가 독일의 RWE에 매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3만 가까운 지방자치체가 존재하여 매우 작은 사업체가 많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지금도 공영으로 수도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파리 등 큰 도시에서 사업운영이 온데오 비벤디라는 물기업에 맡겨져 있는데, 물관리에 관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공적 관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수도사업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여서 물기업과의 사이에서 장기의 매니지먼트계약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주식을 자치단체가 소유하여, 주주배당이라는 형태로 자치단체수입에 이월할 필요도 없는 시스템으로, 그 점에서는 일본의 공영기업제도와 아주 비슷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 수도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외에 지방의 정치가나 자치체대표 등에 의한 외부이사가 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적정·건전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외부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지닌 전문가(인사노무, 경영, 수도시스템 등)가 제언·감시하는 시스템도 제도화되어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시민경영형 경영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약 80%가 공영수도이고 20%가 민영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수도사업경영도 했던 엔론의 부정경리문제나 애틀란타수도의 민영실패사례도 언급되었고, 수도사업의 운영을 "공이나 민이나 하는 신화논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반성이 나왔다. 문제는 사업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느냐 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 어느 쪽이든 소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물 관리나 물 사업에 관한 엄격한 공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사례는 없고, 물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실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흐리고, 경영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일반행정시책(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2) 일본에서의 움직임

일본에서는 현재, 공무원의 아웃소싱이 정치적 과제로 밀려 올라오고 있으며, 정부나 경제단체는 행정서비스의 민간개방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① 일본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회의  
"민영화" 등의  
주제와 관련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96년  
수도사업  
관련  
회의에서  
"안전한  
공급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시초손  
통합과  
수도사업  
통합은  
비슷하되  
다른  
것이다.  
④ 시초손  
통합은  
정부의  
재정우대  
조치가  
통합의  
동기이다.  
⑤ 시초손  
통합과  
수도사업  
통합은  
목적  
이  
다르다.



정부가 경제단체는 아무래도 진심으로 20년 뒤쳐진 대처리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에 관한 한 예외는 아니다.

*민중 - 즉 민중이든, 민중적이지는 않지만 민중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 민간위탁에 대해 하리요, 왜냐하면*  
수도사업도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나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민간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지방독립행정법'의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정관리자 (민간기업이나 NPO법인 등)에 포괄적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활력도입'의 틀이 준비되어왔다.

일본에서는 환경문제나 수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다. 또 수도사업단체도 여러 외국의 수도사업 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국내적인 저항감은 뿌리 깊다. 따라서 정부나 경제단체의 방침도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것인가 민영 활력의 도입인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합규제개혁회의 답신에서는 "수도사업에 대하여 민간으로의 사업양도, 민간위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상하수도업무의 민간위탁화' 추진을 답신으로 내고 있다. 수도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후생노동성은 수도사업의 경영·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통합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일로 치면서, 국민 연계 (일본판 PPP)를 도모하고자 한다. 수도사업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사이드는 '수도는 시민이 만든 국민의 재산', '수도의 사명은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설비투자, 시설의 갱신을 하여 차세대 국민에게 건전한 수도를 인계하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광역화와 효율성의 발휘', '민영화문제는 국민(시민)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후생노동성과 마찬가지로 스탠스에 있다.

국민감정, 수도행정 관할 행정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스탠스가 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여겨지나, 정부나 경제단체 사이드가 수도의 민영화를 의도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한다고 해도, 수도사업에 관한 한은 그리 간단하게 민영화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5. 일본에서의 '개혁'의 의미와 '안전한 물' 공급의 확보

일본에서는 지금 '고이즈미 구조개혁'이라 칭하여 다양한 제도 재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앙·지방정부가 국민과 계약한 행정서비스에서 철수하고, 국민 자신의 자기책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국민국가를 폐기하고 별개의 '국가의 형태'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을 지니는 자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어서 규제가 불충분하기는 하나, 하천과 호수와 늪 등의 표류수에 대한 수리권은 국가관리로 되어 있고, 수도사업체가 취수하는 장소도 국가가 지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똑같이 '안전한 물'을 얻을 권리가 보전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의 시설정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나 경영상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수도사용료는 적정한 요금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급속하게 소자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 사실은 수도의 사

용이 앞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에서는 수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정비나 낡은 시설의 갱신이 필요하다. 즉 요금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대한 시설정비·갱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을 목표로 수도사업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에서 '물비전'이 검토되고 수도사업경영의 규모 확대가 지향되고 있다.

일본의 수도사업은,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재화라는 것, 역병 등에 대한 대책(공중위생) 등등의 관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수도법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경영(시초손경영의 원칙)할것을 정하고 시설정비나 경영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시설투자와 관련된 '국고보조'나 기채(起債)발행(자치체의 책임에 의함)이 가능한 시스템은 자금조달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법인사업체나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 공도(公道)의 지하를 점유하며 매설된 수도관망의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은 이용자부담의 적정화, 건전한 사업경영을 도모하는 데에는 매우 큰 요소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유지되고 있는 공영수도가 사유화되면, 사업목적이 '공공의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주주이익의 추구로 되므로, 당연히 면세 등의 우대조치는 폐지되게 된다. 이 결과, 수도요금의 급등이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게다가 소자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앞으로 수도사용량이 줄면서 요금수입이 줄게 될 것인데, 한편에서는 시설 갱신기를 맞이하여 시설을 적절히 갱신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안전한 물 공급 확보'를 위한 시설정비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도 물 기업이 자비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정비나 갱신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수도사업을 사유화할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 도시 활동의 기반시설인 수도가 '사용요금과 안전'의 양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기본적 인권'인 '안전한 물'을 얻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비위생적인 물을 이용하게 될 국민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6. 노동조합의 활동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젠스이도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물 행정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물의 유역관리를 추진하여 건전한 물 순환계의 구축을 도모하며, 령고(連合)나 지치로(自治勞)와도 협력하면서 '물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도행정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이나 수도사업체인 '일본수도협회'와도 협력하면서 수도비전을 책정하여 수도사업의 광역통합이나 수도기술의 유지·계승의 틀 만들기를 하고 있다. 셋째로는 수도정책의 달을 정하여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하천의 수질조사나 청소, 수도시설이나 수원지 견학회 등을 조직, 시민들에게 물 환경의 현상이나 수도사업의 현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민간 위탁화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수도사업자가 해야 할 업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있다.



수도비전에 대한 '젠스이도(全水道)의견'

검토회 위원용 레지메

아래 쓴 ①법적 규정을 해야 할 사항, ②이념에 관한 사항, ③실시에 임해서 조직 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비전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법적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 1) 수원보전에 관한 사업자의 역할에 대하여, 그 어떤 형태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수도사업의 경영주체를 '시초촌(市町村)'으로 규정한 법 제6조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관점과, 켄(縣) 레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존재한다는 실태로부터 도도후켄(都道府縣)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 3) 수도분야에서의 국제공헌에 관해, 그 어떤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2. 이념에 관한 사항

- 1) 법제1조에서 규정한 '청정하게 하여 풍부저렴'이라는 '목적 규정'에 대하여, 그 의미하는 이념을 국민 전체에 널리 철저히 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수도사업사이드'에서 본 수질수량, 수리권문제 등의 시책을 검토할 수 있고, 물 행정의 통합을 촉진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은 별지 자료로 배부한 '이념법'으로서의 '물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3) 수도분야에서의 국제공헌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수도사업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하기 위해, 시설건설, 운영·관리, 자금조달 등의 토털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는 공공(公公)협력(퍼블릭 간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조직 틀에 관한 사항

- 1) 통상채해에서의 지원체제의 정비·기능화, 대규모채해의 복구지원비에 대한 공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체제에서의 정부, 도도후켄, 사업체의 역할 등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 수도사업에서의 기술의 유지·계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 인원의 확보와 더불어, 전국적인 규모의 기술연구기술강습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 국제공헌에 관한 이념(위에 서술한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에 입각하여, 수도 분야의 토털플랜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틀(상대국 실태조사, 기획·입안, 파견요원 확보 등을 할 사업단체, 사업자와의 종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 4) 국제공헌분야, 기술의 유지·계승 분야에서 집행되는 재정이 '목적외 지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책(법적 검토, 새로운 조직 틀에 의한 목적 내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상, 본 검토회에서 검토한 바, 비전에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김낙중

I 신자유주의와 물의 사유화

1.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영향

- 신자유주의의 특징
  - 1) 관세없는 자유무역
  - 2) 시장의 세계화
  - 3)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 신자유주의의 영향
  - 1) 전지구적 불평등
  - 2) 국제 투기자본의 영향증대
  - 3) 소비사회
  - 4) 전지구적 환경파괴

2. 신자유주의적 환경파괴와 물의 민영화

- 환경파괴의 경향
  - 1) 야생동물의 국제교역의 확대
  - 2) 숲의 파괴와 생물종 감소
  - 3) 화석연료(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
  - 4) 물의 상품화와 민영화
- 물의 상품화와 사유화(민영화)
  - 1) 물을 바라보는 관점 : 물 공급과 사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여부  
기본적 필요 Vs 기본적 권리
    - 기본적 필요 : 시장과 이윤추구(민영화)에 따른 물공급
    - 기본적 권리 : 정부책임하의 평등한 물 사용
  - 2) 2000년 헤이그 세계 물 포럼 : 물을 기본적 필요로 규정

환경운동의 주요 과제

기개 과잉역사(물) → 이념  
공공경제 · 수리권



3. 물 사유화의 영향과 분쟁

□ 영국의 물 사유화의 영향

- 1) 영국의 물 사유화와 수도요금 인상
  - 1989년 물 사유화후 수도요금이평균 44% 인상
  - 1989 - 1995 사이에 수도요금 109% 상승
  - 1989 - 1995 사이에 기업이윤 605% 상승

□ 국제하천을 둘러싼 분쟁

- 1)나일강 :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의 갈등
- 2)요르단강 :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 3)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 터키, 시리아, 이라크
- 4)메콩강 : 중국,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II 한국의 수자원현황과 물정책

1. 수자원이용과 물정책

□ 수자원 현황(1998년도 통계-수자원공사)

- 1) 수자원총량과 이용량
  - 연간 수자원 총량 : 1,276억톤
  - 총 이용량 : 331억톤(26%)
- 2) 강수량의 특징과 분포
  - 연평균 강수량 : 1,283mm(세계평균 973mm의 1.3배)
  - 1인당 강수량 : 2,705m<sup>3</sup>(세계평균 26,800m<sup>3</sup>의 약 1/10배)

□ 물정책

- 1) 공급 중심의 물정책(2002년 현재)
  - 총 15개의 다목적 댐(총 저수량 : 18,151m<sup>3</sup>)
  - 1,214개의 대형댐(세계 7위, 댐 밀도상 세계 1위)
  - 27개의 댐 건설 계획(건교부 댐건설장기계획)
  - 2,451개의 저수지 축조(농림부 3차 농업용수 10개년 계획)
- 2) 국가와 공기업 중심의 물공급
  - 광역상수도 사업 : 수자원공사
  - 지방상수도, 중소규모 상수도 : 지자체

2. 수자원관리제도의 특징

□ 관리주체의 분산

- 1) 수량(건교부 담당), 수질(환경부 담당)
- 2) 물관련 의사결정구조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 3) 생활용수공급 : 광역 및 지방상수도

□ 유역관리체계의 도입

III 상수도 사업과 현황과 개선점

1. 상수도 사업현황

88.4% 상수도 보급률, 30% 수도 과다, 100% 지체 문제

□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운영

- 1) 독점 운영체제로 인한 경영효율성 문제
- 2) 정수시설의 노후, 저조한 가동률 문제
- 3)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의 문제

□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

- 1)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
  - 지리적 환경에 따른 편차가 큼
  - 행정구역별 운영에 따른 효율성
  - 수원지가 없는 경우 수도사업자간 갈등
- 2)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 광역상수도 공급의 지역간 비형평성과
  - 광역상수도의 물배분 갈등
  - 광역상수의 공급의 지역적 편중

□ 체계상의 문제점

- 1)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수도사업자간 중복투자, 과잉투자
  - 댐 건설 등 수원지 확보와 환경파괴
- 2) 광역상수도 사업자의 권한 강화
  - 광역상수도 사업자 = 중앙정부 라는 인식
  -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예산, 집행력 부족

2. 국민의 수도물 불신과 상수도 사업



수돗물  
수질  
수돗물  
수질  
수돗물  
수질

- 수돗물 음용현실
  - 1) 낮은 음용실태와 원인
    - 음용비율 : 약 1%에 불과
    - 원인 : 소독약품새 상수원오염, 수도관 노후, 정수장운영에 대한 불신
  - 2) 수돗물 관련 사회적 쟁점
    - 안전성 확보 : 바이러스와 원생생물 검출
    - 약수터 우물 등의 안전성 논란
    - 수돗물 불소화 논쟁
    -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 1) 노후화된 정수장
  - 2)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투자부족
  - 3) 건기, 건천화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
- 광역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 1) 광역사업자의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
  - 2) 국책사업 집행을 구실로 지방정부 압박
  - 3) 용수수요와 수자원에 대한 정보 독점
  - 4) 조직유지와 조직 이기주의
- 3.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수질조작 사례와 문제점
  - 울산 정수장의 조직적 수질조작
    - 1) 울산시 정수장의 조직적인 수질 조작과 은폐(2004.3.11. 보도)
    - 2) 언론보도와 자체감사 결과로 사실로 확인
    - 3) 울산시와 환경부의 책임회피나 떠넘기기
  - 중소규모 정수장의 수질 조작, 은폐와 수돗물 불신
    - 1)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2)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에 일조
    - 3) 공무원, 공기업의 신뢰저하와 상수도 사업 민영화 동조
- 4. 수도행정의 공개와 참여확대 필요
  - 정보의 독점과 국민들의 불신
    - 1)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련 정보독점
    - 2) 행정의 비민주성, 미공개

- 3) 수도 서비스와 경영효율의 저하
- 4) 먹는샘물, 정수기 시장의 확대에 의한 사회적 비용증대

#### IV 한국의 물 사유화 논쟁에 대한 제고

##### 1.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물 사유화 관련

- SOC에 대한 한국적 특수상황
  - 1) 전력, 도로, 철도, 가스 등 주요 SOC의 공기업화
  - 2) 신자유주의 세력의 민영화 압력
  - 3)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따른 후유증

수돗물과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수도사업에 대한 개혁과제가 논의되면서 앞으로 갈 것!

- 물 사유화의 영향
  - 1) 경영효율성 제고, 품질관리 기대
  - 2) 요금 인상, 이윤 극대화 추구
  - 3) 인력의 전문성, 시설투자, 서비스 확대

##### 2. 물 사유화 논쟁에 대한 제고

- 수돗물 신뢰회복이 우선
  - 1)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모색
    - 수질관리, 정수장관리
    - 수도 행정의 공개 : 울산 수질조작의 예
    -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만들기
  - 2) 수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수자원에 대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행정
    - 용수수요량 예측의 타당성, 객관성, 과학성 제고

##### 3. 사회적 합의없는 물 사유화 추진반대

- 국가의 물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 1) 수자원관리, 확보, 개발
  - 2) 수자원 통계
  -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재검토와 재작성
  - 4) 기존 통계에 바탕을 둔 무분별한 수자원개발 금지
  - 5) 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완료



- 사회적 합의 이후 물 사유화 논쟁 시작
  -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희생양으로서의 물 사유화 반대
  - 2) 지탱가능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물 공급 체계 결정
    - 현행유지
    - 위탁운영
    - 시설투자+위탁운영
    - 완전 민영화 등.

4. 수도사업자와 민간단체와의 교류

- 수도사업자와 시민단체와의 교류 필요
  - 1) 수도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관리감독
  - 2)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을 의미
- 수도물 시민회의
- 중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제도개선 T/F팀

V 결론

1. 국제투기자본과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반대
2. 수도물에 대한 불신인정과 극복노력 선행
3. 수도행정, 정보공개
4. 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5. 사회적 합의 이후 물 사유화 논의 필요

합성이라든가 이윤으로 민에게 돌려주지 않겠는가?  
'물'이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자문위원 송유나

때가 되면 반드시 법제화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의 지대 내지  
수도사업에 대한 투쟁과 연계  
- 공공부문에서의 투쟁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 공공부문에서의 투쟁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1.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모범으로 낙인찍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사유화, 노동현장에 대한 각종의 탄압,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도덕적 공세 속에서 극자적 분노를 형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 쟁취와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확장시켜왔다. 즉, 공기업 매각 반대·사유화 저지 투쟁이 직접적인 인원감축의 현실화, 노동조건 악화라는 조건에서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해왔으며, 나아가 구조조정 저지라는 국가권력과의 직접적인 투쟁의 필연성으로 전화해온 과정이었다 할 것이다.

1) 99년-2000년 투쟁에 대한 간략한 고찰

사유화 저지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사실 99년 여름부터라고 할 수 있다. 99년 9월, 한국전력·한국중공업·한전기술·한전기공·원자력연료·원자력연구소 등 전력관련 6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자회사의 매각과 사유화로 연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11월에는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동투쟁의 경험이 전무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투본 투쟁은 여의치 않았다. 더욱이 공기업 사유화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확장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의 관료성과 낙하산 인사 등을 들어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변했고, 오히려 사유화를 통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2000년 8월 전력노조가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전력 공투본의 확대·재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통·철도·가스 등 사유화 대상 사업장으로 투쟁 주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이 결과 한전·철도·가스 및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한 한국노총의 공공노협과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공공연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연대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관치 경영 분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중앙노사교섭기구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출범했으며, 11월 범대위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양노총의 연대를 추동했던 전력과 통신, 양 노조조차 서로



를 신뢰하지 못했으며 양노총 간의 실질적이지 신뢰 있는 '연대'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상 유례 없는 총파업으로 부풀려졌던 투쟁 전선은 전력노조의 3번의 파업 유보, 철도의 합의로 일순간에 무너졌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홀로 된 파업만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투쟁 전선에 있어 연대와 신뢰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연대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2001년 10월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의 건설과 철도 발전 가스 공동투쟁의 출발

철도·가스·발전·지역난방·고속철도·전력기술 6개 노조와 공공연맹은 2001년 10월 31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였다. 새로운 공동투쟁 단위가 건설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은 지난 2-3년 간의 투쟁의 역사를 철저히 반영할 것이다. 공투본 건설의 판건이 되었던 철도와 가스, 그리고 발전노조가 상급단체를 달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양노총 간 연대의 문제는 그 외연을 갖추는 일에서부터 예상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과 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이후, 정세적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노동운동 진영에게 있어 사유화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다. 특히 50년 어용의 역사를 깨고 비로소 민주노조를 건설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신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발휘할 수 있는 정세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무척 컸다. 발전노조의 경우, 민주노조 건설·민주노총 가입으로 내달려오는 숨가쁜 시간 속에서 투쟁의 주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도·가스·발전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이 모색되었다. 물론 철도와 가스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상황, 3사 모두 실질적으로는 신생노조이며 조직적 장악력이 취약하다는 점은 투쟁의 난제이자 불확실성으로 작동했다.

물론 12월까지의 상황은 그 동안 투쟁에서의 오류를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투쟁이 전개되는 양상, 투쟁의 쟁점, 연대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은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투쟁일정의 분산에 따라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는 고스란히 이어졌다. 철도와 가스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인가, 상정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분산될 것인가, 각 노조 공히 법안 상정 여부에 따라 설정한 파업 투쟁의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가 등이 끊임없는 논쟁의 주체였다. 철도와 가스를 분리·타격하고자 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끌려 다니면서, 일정에 따른 수동적인 대처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2001년 공동투쟁은 철도와 가스산업 사유화 법안처리의 일자, 그것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투쟁의 시점과 투쟁의 수위를 조절해나가는 양상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철도나 가스나, 분리나 아니냐를 점치는 과정에서 결국 법안 처리는 2002년으로 유보되었고, 공투본 소속 사업장들은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2002년 투쟁과 사유화 중단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형성

2002년 1월 27일, 발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2달 3초 투쟁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사실 발전의 경우 파업을 상정할 때 피크타임인 여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점을 만들어야만 했다. 더욱이 이미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공동 투쟁의 계기를 통해 사유화 정책 전반을 중단시키고 이 속에서 발전 매각의 저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지를 결합시켜야만 했다. 더욱이 이제까지와 같이 주어진 국회 일정에 전전하여, 그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는 식의 '따라가기 식'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전 노조의 결정으로 긴장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유화 저지가 노동조건 개선, 임단협 쟁취라는 현장의 구체적 생존권 요구와 구체적으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물론 철도·가스·발전 공히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지만, 연대 투쟁에 있어 상대방을 의심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점치는 그 순간 이미 그 연대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오히려 연대의 주체인 자신을 돌아보고 그 결의에 기반하여 연대의 힘을 독려함으로써만이 실질적인 연대의 성과가 발휘될 수 있다. 향후 발전 매각 및 배전 분할 저지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구정을 넘기고서야 3개 노조의 공동투쟁, 공동파업의 실내용이 결정되었다. 공투본은 '3개 노조의 요구안이 공히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3개 노조의 요구안 중 어느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을 시, 그리고 공권력의 투입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물리적 탄압이 돌발했을 시, 즉각적인 연대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공동결의를 확보하였다. 2월 25일 04시 3개 노조 공동파업이 선언되었다. 25일 가스노조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날 밤 20시를 기해 발전 조합원들은 산개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27일 07시 철도 역시 협상을 타결하였다.

5600명 조합원 중 5400여 명의 참가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시작한 발전노동조합의 파업은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38일로 장기화되었다. 전력산업의 특성 상 선택한 산개 투쟁 전술은 매우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었고, 오히려 산개 투쟁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발전 파업의 원인인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가족대책위의 활동은 사유화 정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발전 파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소위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대부분의 파업 대오는 공장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개 파업은 10-15인 정도의 협소한 인원 정도로 구성되어 시야와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전조합원들은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수련원, 시민사회 운동단체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게 되었



다. 이 과정은 새로운 공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전국적으로 어우러지고 사회운동 전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유화 저지 투쟁의 정당성 및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은 충분히 사회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 조합원들의 경험이 오히려 투쟁의 일정한 패배를 경험하고도 유례없이 빠른 조직력 회복을 보이는 현실 조건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월 2일 복귀를 기점으로 발전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철도노조는 2번의 파업을 감행해야 했고, 올해 가스산업구조개편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동발전의 매각을 유보시키고, 철도 사유화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최근 배전 분할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는 점이다. 나아가 사유화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역시 사유화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 2. 사유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유화 정책이 현상적으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주요 공기업이 줄줄이 사적 독점의 수중으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공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사회적 논쟁의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물론 사유화 지연에 대해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부담스러웠고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정부 일각의 변명도 있었고, 그런 만큼 '정부가 확고한 사유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는 식으로 사유화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사유화 정책 중단 요구가 사회적 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유화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매각 및 배전 분할, 철도와 가스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며, 발전 매각과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의료 교육 문화 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필수 공공재의 사유화 정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사유화 정책이 시장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사유화 정책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사유화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그 동안 사유화 정책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사유화 정책은 시장화·개방화 전망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가 주도하여 자본 발전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국가자본·공공부문의 위치는 절대적이며, 핵심적인 산업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가가 소유하는 자본의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전화하고, 전면적으로 시장화·개방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사유화를 중심에 놓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 현재 사유화 정책은 국가, 즉 공공적 소유를 사적인 소유로 전화하는 것, 즉 '팔아치우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의 자본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개방화에 부응하여 개방의 교두보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진척되어 가는 정세에서 사유화 정책은 향후 어떠한 위치를 점할 것인가, 어떻게 재가동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사유화 정책은 법적인 공방이 중심에 서 있었다. 공기업의 위상 때문이기도 한데, 사유화를 위한 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응만이 구체적인 접점이었다. 사유화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법개정이 완료된 전력 산업, 공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철도 산업만을 보더라도 향후 사유화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미 사회적 의제로 부상된 사유화 정책을 넘어서는 공공적 발전 전망에 대한 쟁점이 새로이 열려 가고 있다.

### 1) 시장화 개방화 정책과 사유화

정부의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 경제특구의 전국화, WTO·FTA 협상 등이 과연 사유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미 2003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의 시장개방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지역 내 환경 문제와 노동의 문제는 쉽게 폐기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다.<sup>1)</sup>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용된 것들이 그 지역 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는 자율화·개방화의 조치는 사회적으로 역 평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내의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된 조치를 전 국토로 확장시키고자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과 의료, 문화의 개방은 전국적인 개방화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며, 환경과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1)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 17조 4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관해 파견업무 허용·허용기간 확대(법 제 17조 제 5항) 단체 행동권 제한(법 제 19조)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 17조 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면제 : 환경관련 법률 34개  
 - 조세 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법 제 15조 1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 재산의임대료 감면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증한다. 경제자유구역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구상이다.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은 투기적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유치하기 위해 국내적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기적 금융 자본이 유입되려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을 최적화해 주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악은 환경, 인권, 노동 전반을 포괄한다. 2004년 올해 만료되는 WTO 서비스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WTO 서비스 협상은 12개 조항을 담고 있는데, 말이 12개 조항이지 그야말로 한 국가를 쥐었다 놓았다 할 만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WTO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법 개편, 즉 개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일 무역협정만을 보더라도, 노동 관련법 제반의 엄청난 개악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즉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듯이 보인다. 한일 투자 협정에서 일본의 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 1년 이상 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조항의 철회, 휴일·월차 수당 의무화 해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등이 그 내용이다.

WTO 서비스 협상에는 에너지 산업과 운수 산업 전반의 포괄적 개방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사유화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도, 사회의 여론이 사유화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경제자유구역, 각종의 투자협정과 WTO 서비스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부문 사유화는 시장화·개방화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지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국제적 협약의 경우 국내법을 상회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국사회를 들쭉여왔던 논쟁은 일순간 의미 없는 과거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비껴가고, 해당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면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기에 사유화 중단을 요구해왔던 제반 주체는 이제 시장화·개방화의 추세를 읽어야 하며, 이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사유화 중단을 중심으로 연대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화·개방화에 저항하는 민주시민 사회 운동과 적극 결합해야 한다. 당면한 교육·문화·의료 물 시장의 개방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는 물론 환경의 파괴와 인권의 소멸에 저항하는 다수 시민운동 진영과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시장화·개방화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안이 국민적 사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2)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공세의 강화

공기업은 개별 공기업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이전에 정부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전제되어 있다.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간의 관계를 보면, 정

부는 개별 공기업에 이윤 중심의 경영을 요구하면서 조직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정원 제한 등 예산의 권한을 쥐고서 전반적인 투자를 포함한 통제권을 가지며,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지침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경영진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차기 예산의 증감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경영진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발전 5개 사가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보상체계, 평가 시스템이 중요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의 효율성, 민주화의 지표로 언급되는 회계정보 투명성 개선과 공개, 회계정보의 전산화, 경영정보시스템 강화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하에 사유화를 준비하는 경영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뿐이다. 이러한 통제 구조가 결국 인원감축, 조직 통폐합, 외주하청, 고객지향적·수익성 위주의 경영, 현장 통제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만을 보더라도 사유화의 쟁점을 피해 가는 듯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공격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양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철도 공사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풀리게 되자 정규직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수 분야의 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역 신 역사 28개 창구 중에서 20개 창구의 외주화가 추진 중이며, 용산역은 19개 창구 중 12개가 외주화 대상이다. 이미 작년에 공개된 철도청의 운수분야 외주화 계획에는 2434명이 외주화의 대상이었다. 경춘선과 분당안산·일산·과천선 등은 역 전체가 외주화 대상이다. 수도권 전동차 차장과 수송원 업무 역시 외주화의 대상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2003년 5500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근속연수 15년 이상이 된 사람들 중 "업무부적격자(D등급), 114 분사 시기 잔류한 여성 조합원, 운전 전기 방호 등 비보직자와 그 외 고령자, 저학력 소지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미 98년에서 2000년까지 13500명을 강제퇴직, 명예퇴직 시켰으며,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7000여 명을 정리해고 및 도급의 형태로 대체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사유화사업의 → 노동자에게도! '사유화사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003년 12월 20일 서울 지하철 노-자가 "21세기 지하철 발전 도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서는 2006년까지 2773명을 감원하며 외주용역과 민간위탁을 확대하며,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개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지하철 공사 흑자경영계획을 위해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협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지하철 역시 이미 99년에 1621명이 감원된 바 있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공격,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것이며, 사유화의 쟁점이 살아 있는 한 이 공격의 주리는 더 세게 조여오고 있다.

발전과 전력 역시 교대제 개편, 직무 통폐합을 통해 환경·건축·토목·토건 등 소수직



군 자연도태, 업무 분장을 통한 일방적 정원조정, 화학부 중심의 정원축소 등 직접적인 인원감축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계층제어부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전사업소에 걸쳐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 하고자 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인해 월차수당과 여성조합원들이 생리휴가도 폐지되었으며, 인센티브와 상여급을 차등 지급하고 조합원 영역에까지 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근근히 현장 업무를 메워가면서도 오바 홀 공기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경영혁신 정진대회·품질개선정진대회, 각종의 제안제도를 통해서도 노동강도가 현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유화 정책의 중단이 개별 사업장의 열망만으로 가능하지 않듯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구조조정 중단 요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대응은 국회 법안을 둘러싼 연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대,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사업장간의 실질적인 연대는 부재하였다. 더욱이 사유화 정책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 동안 전력·발전·가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대응 질서는 이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 있다. 현재 사유화 정책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을 주도해나갈 핵심 주체의 공동 대응은 미약한 상황이다. 사유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나아가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동조합 간 실질적 연대, 노동조합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경숙 리



## 韓国の上水道の民営化推進の現況と問題点

全国公務員労働組合  
民営化阻止特別委員会 委員長 李원하

### 1. はじめに

水は自然から取水され用途に合うように処理されて利用された後、再び適正な処理を経て自然へと排出される。上水道事業は自然資源である水を効率的に利用し合理的に管理するための全水資源管理体系の構成要素である。

水資源に対する國家的財産権を前提とするとき、すべての国民は同一の質の水資源を享有する権利があり、國家は水質をそのような水準に維持する責任がある。水が地球上で枯渇しつつある。その理由としては、人口及び水消費量の爆発的な増加、工業用水の使用量増加、企業營農の使用増加、地表水の汚染等が挙げられる。

我が國の水の利用及び管理と関連した業務は政府内のいくつかの部處に散在しているが、水環境の構成要素別に見れば、水量管理機能と河川管理は建設交通部が、水質管理機能と水生生態系管理は環境部が担当している。機能別には、建設交通部は一般河川管理、多目的ダムと廣域上水道開發を担当しており、全用水需要の2/3を占める農業用水は農林水産部が、水力發電は産業資源部、地方上水道は行政自治部が担当している。

我が國の上下水道事業の実態を見てみると、上水道事業の經營主体は原則的に地方自治体であり、水道の計畫及び水道施設の整備・擴充、料金体系設定等上水供給に関するすべての業務を引き受けている。上水道の供給において國家は水道に関する総合的な計畫樹立と施策講究、そして水道事業者に対する技術及び財政的支援の役割を担う。下水道事業は水資源の保全を図るためのサービスの一つで、下水道事業の經營は地方自治体固有の業務であり、中央政府内の所管部處は環境部と行政自治部である。

上水道事業の運營上の問題点としては、經營効率性の不足、供給側面では淨水施設の老朽化、容量不足、水質管理の側面では實驗室(裝備)の未備、人員不足、經營管理の形式化、組織・人員の人事異動が多いために業務の効率性維持が困難であるなどの点が挙げられる。

下水道事業の運營上の問題点としては、經營マインドの不足、長期經營計畫の不在または不充分さ、管理者の下水道財政に対する認識不足、政治的な要素による事業優先順位が



らの排除、下水暗渠投資の不均衡、組織・人員の管理・運営が不合理で、水質業務を担当する環境職公務員が絶対的に足りないこと、また頻繁な人事異動等が指摘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水の重要性と管理の問題点等が常時存在し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その克服手段として単純に水の私有化政策に固執するのは、再考すべきである。水不足現象が全世界的なイシュー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いる時点において、水の私有化は超国籍資本の世界化という巨大な背景を基礎に、地球とすべての生物種に属する資源である水を商品化し世界化の流れの中で保存するというのは、むしろ水の危機を煽る短期的な弥縫策にすぎない。

水の私有化は上下水道の民営化、ミネラルウォーター販賣、ダム建設等の形態で現れる。水不足を解消し資源を効率的に利用するという水の私有化の大命題は、世界各地で予想もつかないくらいの水道料金の値上げ、企業利潤に隠された水質悪化、無分別な水資源開発による環境破壊等を生み、抵抗に直面している。

## 2. 韓国の上下水道の一般状況

### イ. 地域別上水道現況 (1999)

区分	普及率 (%)	1日1人当の給水量(L)	漏水率 (%)	生産原価 (ウォン/l)	料金 (ウォン/l)	引上げ要因 (%)
全国	86.1	388	16.1	535.3	396.9	34.9

### ロ. 経営状態

地方上水道の経営状態は1992年、負債比率が33.2%と他の地方公企業に比して良好な方であり、固定長期適合率は93.8%と、固定資産等への投資はより安定的な財源である固定負債や自己資本でもって調達した。経営成果の側面では、99年全体的(公企業)に当期純利益を実現しはしたが、黒字の団体が45、赤字の団体が47で団体間の差が大きい。

### ハ. 自治体別下水道普及率の現況 (2002)

区分	人口 (名)	施設容量 (千t/日)	処理人口 (名)	下水道普及率 (%)		財政自立度 (%)
				処理箇所数	暗渠普及率	
全国	48,518,573	20,233	36,760,736	207	75.8	59.4

### ニ. 下水道の財政別事業費及び負債実態 (1999)

区分	総収入額 (百万ウォン)	財源別比率 (%)					総負債額 (百万ウォン)
		国庫	交付金 譲与金	市・道費 市・郡費	使用料 収入	原因者 負担金等	
全国	2,668,799	6.1	19.7	45.6	19.0	9.6	2,055,169

### ホ. 下水処理施設事業の民営化事例

2000年末現在、総投資費36,793億ウォン、民間資本誘致可能額17,504億ウォンを目標に全国68の下水処理施設で民間資本誘致による下水処理施設建設事業を推進中にある。2001年1月現在、全国の地方自治体の下水最終処理施設のうち、民間に委託して運営している施設は82ヶ所で7,133.6トン/日である。これは施設数としては全下水処理施設の48%、処理施設の容量面では全体の38.7%にあたる。民間委託運営の処理施設の総人員は7,300名である。

## 3. 民営化推進の問題点

水の私有化は水が本来持っている固有の性質である公共性、安全性、透明性、便益性等に問題をもたらさざるをえない。利潤追求が目標である企業に水の生産と処理を担当させることが妥当かどうかは、長期的な観点から判断されねばならない。外国の事例にも現れているように、民営化の結果、水道料金だけ爆発的に引き上げられ、施設の方は再投資を回避するといった経験に鑑みて、水の持っている生命の基本である自然資源としての機能と役割に重点を置くべきである。問題点を次に挙げてみよう。

### イ. 公共性 (公共財、自然資源) の阻害

水は公共のものであって私的利益の手段とはなり得ないにも拘らず、企業の利益追求の対象に轉落する。

### ロ. 安全性の阻害

環境と生命の基本である水を私有化することにより、民間委託を受けた企業は私的権力が肥大し政府と地方自治体の統制が不可能な企業として国民の生命を脅かすかもしれない。

### ハ. 透明性の阻害

非常に大きな力を有する企業を制裁しうる効果的手段が失われて、水質汚染等に無防備状態をもたらし、透明性に深刻な問題を発生させる。

### ニ. 便益性の阻害



民営化は必須的に施設投資費用等を需要者に轉嫁して料金の大幅な上昇をもたらすだろうし、これにより貧困層に自然資源を公平に分配せねばならない國家的責務を放棄するという重大な問題が発生する。

#### ホ. 環境汚染に対する無防備状態

利潤追求が目的の企業に対し、國民の選出した政府よりもいっそう環境保全等に關心をもつ善良な企業を期待するのは現実的に困難である。水は共同財産として残し、公共機關が責任を持って水質を監視し、良質の水を供給するようにせねばならない。

### 4. 上下水道施設の管理的側面からの代案提示

公共財の規模の經濟を實現することが困難でありその非効率性が社會的に問題となっている現在、施設管理の効率化等、政府機能の効率化のために民営化を通して經營の効率性及び競争力を高めようとする生産性向上中心の方法よりは、政府自体の効果的な改善方策を通して水の本来持っている固有の性質である公共性、安全性、透明性、便益性、環境汚染防止等の目標を達成する方法を講究すべきである。その代案として、以下のような方策を提示しようと思う。

#### イ. 水管理体系の調整 — 流域統合管理体系

1) 流域単位の水資源管理のために環境部傘下の(地方)環境管理廳に水質水量管理機能を付与するか、流域単位の水資源を管理する水系管理機構を新設する方法

2) 水系管理機構は、硬直し非能率的な行政管理体制より經營管理体制への轉換が要求され、したがってこれを水系水管理専門機關に轉換するのが望ましい。

3) 水系管理機構の役割は、地域水域の實情に合った水質目標の設定管理、地下水を含めた水の料金徴収(地方自治体)、地方自治体を含めた汚染原因者に対する賦課金徴収、環境税、租税等による中央政府の補助金などで施設支援を財政的に裏付けることなどであり、處理技術の開発及び支援機能も可能。

#### ロ. 上下水道事業体系の調整

1) 一次的に、廣域上水道事業を全体的に擴大して水源開発と取水部分を廣域化するもので、水資源開発と配分において地域的格差を平準化し、同時に單一廣域上水道料金を適用して、各地域の取水費用を平準化する方法。

2) 上水道事業、下水道事業を水系を中心に圏域別に廣域化するもので、水に関する地域間の摩擦を最小化し、水系中心の統合事業組織が上水供給に関連した諸般の事業を遂行し、上水供給の費用は受患者負担の原則と汚染者負担の原則に基づいて使用者と関連地方自治体が分担する方法である。すべての國民に権利のある水資源分配の公平さの側面にお

いて適用しうる方法となるためには、下水排出に対する費用負担(外部性調整) が合理的になされることが前提となる。

3) 究極的には、水系中心の統合された水事業体系が下水處理関連部門まで体系内に包含するようにすることにより、地域に及ぶ外部効果の調整及び水供給関連の費用分担が事業管理体系内でなされるようにするのが望ましいと思われる。つまり、水系全体にわたる上下水道事業の統合形態が代案となる。

4) 地方自治体連合組織構想で、現在の上下水道事業体系において最も容易に適用できるものである。すなわち、水系全体にわたる上下水道事業計画に従い近隣の自治体との共同事業が有利な地域は區域を分割して、上水供給量と汚染處理總領を基準に費用を分担、施設建設及び共同運營を行なう方法。

### 5. 公務員労組の対応方法

水の私有化阻止闘争が國民の生命を守る闘いであるという認識を形成することを目標とし、以下の事業を推進する。

イ. 上下水道委託管理阻止戦線構築、馬山市のチルソ浄水場の阻止闘争の勝利を基盤に、國民の生命である水の私有化を阻止する闘争を組織する。

ロ. 國民闘争として組織化するための事業配置

ハ. 民間委託施設の持続的な監査活動展開

ニ. 國會と市議會、國民に対する廣報事業展開

ホ. 世論形成のための討論會、住民召還制等を積極的に活用



## 日本における水道制度の現状と課題

全日本水道労働組合  
書記次長 水越 隆

### 1. 日本における近代水道の歴史

日本の水道は、開國に伴う伝染病対策（公衆衛生の一環）として開始され、横浜、函館などの港湾都市に近代水道の敷設が始まる。（1887年）

水道法が制定され、水道事業は市町村経営が原則となる。（1890年）しかし、財政問題等から大都市でしか水道普及は進まなかった。

戦後地方自治法が制定されて地方自治制度が確立されたこと（1947年）、公営企業法が制定され、水道事業等の地方公営企業の経営の枠組み（独立採算制度、企業会計方式の導入、当該自治体からの長期資金の借入れや企業債の発行等の資金調達の仕事）が確立されたこと（1952年）、新水道法が制定（1957年）され、水道事業の目的や水質基準等が明確化されたことで、日本の水道普及が急激に進むこととなった。現在では約96%にまで水道普及は進み、国民皆水道となっている。

### 2. 日本における水道事業の現状

日本には約3300の自治体があるといわれてきた。現在、この自治体を1000強程度の自治体に統合すべく、政府は市町村統合を進めている。（2004年4月1日現在では3100まで統合が進んでいる）

水道事業は、市町村経営が原則であるため極めて小規模な事業体が多い。日本全体の水道事業体数は約10666弱。その内供給人口5000人以上の上水道事業は約2067事業体程度で、多くは供給人口5000人未満の簡易水道で、約8599事業体。私営水道は、団地造成等で作られた不動産企業等が経営する極小規模な民営水道が約10事業体程度存在する。（日本水道協会発行統計資料2003年版）

### 3. 日本における水道事業の課題

工業化と大量生産・消費の過程で生じる廃棄物の処理によって、水道水源の汚染が進

行しており、このことに對する対策（施設整備）が必要になっている。加えて、戦後建設した水道施設が老朽化しており、更新期を迎えていることがある。このため、日本の水道事業体は一様に施設整備や施設更新のための財源と技術力が必要となっている。しかし現在の水道制度においては、財政基盤も技術基盤も弱い小規模な水道事業体が多く、水道法で定められた「人の飲用に適した水」を将来に亘って供給し続けてゆくこと、つまり、持続可能性が危惧されていて水道事業経営の廣域統合が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

日本においては今市町村統合が行われているが、市町村統合と水道事業の統合は似て非なるものである。市町村統合は、政府の財政優遇措置が動機であることから、「統合した場合に得になるか損になるか」といった判断や「文化や歴史性に同一性があるか、道路・通信網は同一か」といった問題が統合の大きな要素となる。これに對して水道統合の場合には、経営問題や原水の水質・水量の問題が大きな要素となるため、水源である河川流域を共通としているかが統合の前提となっていかなざるを得ず、市町村統合と水道事業統合はその目的が異なることから、別立てで考える必要がある。

今政府が進めている市町村統合は、行政サービスの目標や水準を示し、そのサービス提供を行う上での適正規模を定めたものではない。しかし水道の統合の場合には、「安全な水を供給する体制を将来に亘って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ために、この目的に近づけるか実現できなければあまり意味がない。その点で、適正規模を示し、そこに向かって統合してゆくことが求められる。

日本においては、水道水の水質検査を自前で行っている事業体は少ない。水質検査のための機器が高価であるためで、供給人口規模で約25万人以上（全水道調査）に供給している事業体は自主検査の体制が確立されている。

昨年までは、厚生労働大臣が指定した検査機関での検査が義務づけられていたが、今年からは検査機関の指定が規制緩和されて「市場化」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現状から、「安全な水供給体制」を確保する観点で統合を目指す場合には、少なくとも水道水質検査の体制は「自主検査体制」が確保され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言える。そのような観点から、供給規模30万人程度を適正規模とした統合を目指す必要がある。

### 4. 水道事業の民営化（私有化）をめぐる動き

#### 1) 国際的な動き



5月17日～18日にかけて、日本においてIWA（インターナショナル・ウォーター・アソシエーション）のワークショップ「効率的な水道経営」が行われた。

この会議において報告された欧米における水道事業の現況は、各国とも水道事業への公的関与は厳しく、いわゆる「市場化」とはほど遠いものであった。

そもそも欧米諸国における水道事業は、イギリスにおける産業革命を受けて、動力が利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から発展してきたもので、ほとんどの国が民営水道を出発としていたものである。

一般的には欧米の水道は「民営化されている」と理解されているが、これも一様ではないことが解った。株式の発行、執行役員による経営＝民営と譯されているが、株式の所有者が異なり、イギリスのように「市場化」に近いものからオランダのように公營と言えるものまでが存在する。

イギリスの場合は、株式の所有が私的であるために「市場化」されていると言えるが、

水管理は公的関与が厳しく、運営においても「オフワット」等が監視するシステムであって、水そのものが私的の下に置かれている譯ではない。しかし一方、水道料金算定においては、メーターが設置されておらず、水道利用者の不動産価値によって料金が決定される仕組みであり、公平性という点では問題があるようだ。加えて、企業買収がされれば自動的に水道経営のライセンスも移動するようで、極めて不安定であるといえる。すでに、イギリス最大の水企業である「テムズウォーター」がドイツのRWEに買収されている。フランスにおいては、3万近い地方自治体が存在しており、極めて小さな事業体が多く、これらの事業体では今でも公營で水道事業の運営がされている。パリ等の大きな都市において、事業運営がオンデオ・ビベンディといった水企業に任されているが、水管理に関してはイギリス同様厳しい公的関与がされている外、水道事業の所有は自治体であって、水企業との間で長期のマネージメント契約がされて運営がされているのが実態である。オランダについては、株式を自治体が所有し、株主配当という形で自治体収入に繰り入れる必要もないシステムで、その点では日本の公營企業制度と良く似た制度となっている。また水道事業の執行については、執行役員の外、地方の政治家や自治体代表等による外部取締役が当たることになっている。さらに、適正・健全な事業執行を行うための仕組みとして、外部取締役と同等の権限を持った専門家（人事・労務、経営、水道システム等）が提言・監視する仕組みも制度化されている。つまり實質的には、市民経営型の経営システムとなっているといえる。アメリカにおいては、約8割が公營水道で、2割が民営であると報告されている。また、水道事業経営も行っていたエンロンの不正経理問題やアトランタ水道の民営失敗事例にも触れ、水道事業の運営を「公か民かという神學論争にしてしまったことが問題であった」との反省点も

示され、問題は事業の公的性格を踏まえてどう経営の効率化を図るかであるとの報告がされている。

いずれにせよ、いわゆる「民営化」を実施しているとされる国においても、水管理や水事業に関する厳しい公的規制が存在しており、完全に「市場」の判断に委ねられている事例はなく、水が私的に所有されている実例は存在していない。なお、下水道事業については、利用者がサービス提供を受けている意識が薄く、経営になじまないということもあるようで、一般行政施策（税）によって運営が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

## 2) 日本における動き

日本においては現在、公務部門のアウトソーシングが政治的課題に押し上げられてきており、政府や経済団体から行政サービスの民間開放が迫られてきている。

政府や経済団体は、どうやら本気で20年遅れのサッチャーリズムを実施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で、水道事業についてもこの動きに関する限りは例外扱いとはなっていない。

水道事業も政府の総合規制改革会議や経済財政諮問会議等を通じて「民間開放」の対象とされおり、この間、「地方独立行政法人法」の制定、地方自治法改正がされ、公共施設の管理については、指定管理者（民間企業やNPO法人等）に包括的に管理委託ができる「民間活力導入」のツールが用意されてきている。

日本においては、環境問題や水道に対する国民意識は高い。また、水道事業団体も諸外国の水道事業民営化の失敗事例を良く熟知しており、水道事業の民営化に対する国内的な抵抗感は根強い。したがって、政府や経済団体の方針も水道事業を民営化するのかが民間活力の導入なのかが定まっていない。例えば、総合規制改革会議の答申では、「水道事業について民間への事業譲渡、民間委託化をはかるべき」としているが、経済財政諮問会議では、「上下水道業務の民間委託化」の推進を答申している。水道事業所管の厚生労働省は、水道事業の経営・技術基盤を強化するための廣域統合の推進を図ることとして、水道事業の持続可能性確保を第一義としながら、官民連携（日本版PPP）を図ることとしている。水道事業経営を実施している事業体サイドは、「水道は市民の作った国民の財産」、「水道の使命は施設を適正に管理し、必要な設備投資、施設の更新を行って次世代の国民に健全な水道を引き継ぐこと」、「今必要なのは事業の廣域化と効率性の発揮」、「民営化問題は国民（市民）の選擇」という立場を取っており、厚生労働省と同様のスタンスにある。

以上のような国民感情、水道行政所管省廳や事業を直接経営している事業体のスタンスが上記のようなものであることから、業務の民間委託はある程度進むと考えられるが、政府や経済団体サイドが水道の民営化を意図して様々な動きをしたとしても、水道事業



に関する限りはそう簡単に民営化ができる状況にはないと判断している。

## 5. 日本における「改革」の意味と「安全な水」供給の確保

日本においては今、「小泉構造改革」と称して様々な制度見直しが行われている。これらは、明らかに中央・地方政府が国民と契約した行政サービスから撤退し、国民自身の自己責任としてゆくものであって、国民國家を放棄した上で、別の「國家のかたち」を創造しようとしているものであろう。

日本においては、地下水の権利は地上権を持つ者の権利とれていて規制が不十分ではあるが、河川・湖沼等の表流水の水利権は國家管理となっており、水道事業者が取水する場所も國家指定がされていて国民が等しく「安全な水」を得る権利が保全されている。加えて、水道の施設整備等に対する國庫補助や経営上は免税が適用されており、生活費に占める水道使用料は適正な料金が維持されている。しかし日本においては、急激なスピードで少子高齢化が進んでおり、05年以降は人口が減少しはじめると予測されている。このことは、水道の使用が今後大幅に減ってゆくことを意味している。しかし水道事業においては、水道の安全性を高めるための施設整備や古い施設の更新が必要となっている。つまり、料金収入が減少していく中で膨大な施設整備・更新のための資金が必要になり、事業経営が困難となる状況にある。

持続可能な水道事業を目指し、水道事業所管の厚生労働省で「水ビジョン」が検討され、水道事業経営の規模拡大が目指されてきている。

日本における水道事業は、「水」が人が生きて行く上では必要不可欠な財であること、疫病等への対策（公衆衛生）という観点で事業を実施してきていることから、水道法で事業については地方公共団体が直接経営（市町村経営の原則）することを定めている外、施設整備や経営上の優遇措置が取られている。特に、施設投資に関わる「國庫補助」や起債発行（自治体の責任による）が可能なシステムは資金調達を行う上では大きく、法人事業税や固定資産税等の免除、公道の地下を占有して埋設されている水道管網の「道路占用料」が免除されているなど、利用者負担の適正化、健全な事業経営を図る上では極めて大きな要素である。

このようにして維持されている公営水道が私有化されれば、事業目的が「公共の福祉の増進」ではなく株主利益の追求となることから、当然にも免税等の優遇措置は廃止されることとなる。この結果、水道料金の高騰が大変危惧される場所である。加えて、少子高齢化が急速に進む日本においては、今後水道使用量が減り、料金収入が減ることになるが、一方では、施設更新期を迎えて施設を適宜更新する必要がある外、「安全な

水供給確保」のための施設整備も実施する必要が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設備投資のための資金調達も水企業が自前で行うことになるために、「安全確保」のために必要な適正な施設整備や更新が実施されない可能性が高い。つまり、水道事業を私有化した場合、人が生きて行く上で必要不可欠な水を供給する水道、都市活動の基盤的施設である水道が、「使用料金と安全」の両面において、極めて深刻な事態に立ち至ることが危惧される。いずれにせよ、「基本的人権」である「安全な水」を得る國民の権利が侵され兼ねず、不衛生な水を利用せざるを得ない國民が出てくることも懸念されるといえる。

## 6. 労働組合の取り組み

以上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全水道ではまず第1に、日本の水行政の一本化を促し、水の流域管理を推進して健全な水循環系の構築を図るべく、連合や自治労とも協力しながら「水法」の制定を求める運動を展開している。第2には、水道行政所管である厚生労働省や水道事業団体である「日本水道協会」とも協力しながら、水道ビジョンを策定して水道事業の廣域統合や水道技術の維持・継承の枠組み作りを行っている。第3には、水道政策月間を定め、各地方独自の取り組みとして、河川の水質調査や清掃、水道施設や水源地の見學會等を取り組み、各市民に水環境の現状や水道事業の現状についての情報を公開して理解していただく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また組合員については、業務の民間委託化という形において、民間事業者が入り込むスキを作らないよう、水道事業者が行うべき業務は自らが責任をもって行うことを徹底している。



## 水道ビジョンに対する「全水道意見」

検討會委員用レジメ

下記に示した①法的規定をすべき事項、②理念に関わる事項、③実施にあたっての枠組み整備が必要な事項について、水道ビジョンに反映していただくよう求めます。

### 1. 法的規定をすべきと考える事項

- 1) 水源保全に関する事業者の役割について、何らかの形で法に規定する必要がある。
- 2) 水道事業の経営主体を「市町村」と規定した法第6条については、廣域化を進める観点、縣レベルで運営されている事業者が存在している實態から都道府縣まで廣げる必要がある。
- 3) 水道分野における國際貢獻に關し、何らかの法的規定が必要である。

### 2. 理念に関する事項

- 1) 法第1条で規定している「清浄にして豊富・低廉」の「目的規定」について、その意味する理念を國民全体に廣く徹底する取り組みを進める必要がある。
- 2) 「水道事業サイド」から見た水質・水量、水利權問題などの施策が検討でき、水行政の統合を促す法体系の整備が必要である。当面は、別紙資料で配付した「理念法」としての「水基本法」の制定が必要である。
- 3) 水道分野における國際貢獻については、相手國の水道事業が自立できる支援とするため、施設建設、運営・管理、資金調達などのトータルなノウハウが移轉できる公・公協力（パブリック間の協力）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

### 3. 枠組みに関する事項

- 1) 通常災害における支援体制の整備・機能化、大規模災害における復旧支援費に対する公費負担のあり方、支援体制における國、都道府縣、事業者の役割などを改めて整備する必要がある。
- 2) 水道事業における技術の維持・継承を可能とするため、必要人員の確保とともに、全國的な規模における技術研究・技術講習システムを整備をする必要がある。
- 3) 國際貢獻に関わる理念（上記で述べた相手國が自立できる支援）を踏まえ、水道分野におけるトータルプラン支援が実施できる新たな枠組み（相手國の實態調査、企画・立案、派遣要員確保などでの事業団体、事業者との総合調整を可能とする機關）が必要である。
- 4) 國際貢獻分野、技術の維持・継承分野において執行される財政が、「目的外支出」とされないための施策（法的見直し、新たな枠組みによる目的内とする対応など）が必要である。

以上、本検討會で検討のうえ、ビジョンにおいて一定の方向を示していただくことを求めます。

## 水私有化の社会的意味と影響

環境運動聯合

綠色代案局 幹事 キム・ナツチュ

### I 新自由主義と水の私有化

#### 1. 新自由主義の特徴と影響

##### □新自由主義の特徴

- 1) 関税のない自由貿易
- 2) 市場の世界化
- 3) 公共機関及び公企業の民営化

##### □新自由主義の影響

- 1) 全地球的な不平等
- 2) 國際投機資本の影響増大
- 3) 消費社会
- 4) 全地球的環境破壊

#### 2. 新自由主義的環境破壊と水の民営化

##### □環境破壊の傾向

- 1) 野生動物の國際交易拡大
- 2) 森の破壊と生物種の減少
- 3) 化石燃料(石油)確保のための戦争
- 4) 水の商品化と民営化

##### □水の商品化と私有化(民営化)

- 1) 水を見る観点：水供給と使用に対する責任の帰属如何によって違う  
基本的な必要 Vs 基本的な権利  
○基本的な必要：市場と利潤追求(民営化)による水供給  
○基本的な権利：政府の責任の下での平等な水使用
- 2) 2000年ハーグ世界水フォーラム：水を基本的な必要であると規定

#### 3. 水私有化の影響と紛争

##### □イギリスの水私有化の影響

- 1) イギリスの水私有化と水道料金の引上げ  
○1989年水私有化後水道料金が平均44%引上げ  
○1989～1995の間に水道料金109%上乗



○1989～1995の間に企業利潤605%上昇

□国際河川をめぐる紛争

- 1) ナイル川：エジプトとエチオピアの葛藤
- 2) ヨルダン川：シリア、ヨルダン、イスラエル
- 3) ユーフラテス、チグリス川：トルコ、シリア、イラク
- 4) メコン川：中国、ラオス、ベトナム、バングラデシュ

II 韓国の水資源現況と水政策

1. 水資源利用と水政策

□水資源現況(1998年度統計-水資源公社)

1) 水資源総量と利用量

- 年間水資源総量：1,276億トン
- 総利用量：331億トン(26%)

2) 降水量の特徴と分布

- 年平均降水量：1,283mm(世界平均973mmの1.3倍)
- 1人当たりの降水量：2,705m<sup>3</sup>(世界平均26,800m<sup>3</sup>の約1/10倍)

□水政策

1) 供給中心の水政策(2002年現在)

- 総15の多目的ダム(総貯水量：18,151m<sup>3</sup>)
- 1,214の大型ダム(世界7位、ダム密度で世界1位)
- 27のダム建設計画(建交部ダム建設長期計画)
- 2,451の貯水池築造(農林部3次農業用水10ヶ年計画)

2) 国家と公企業中心の水供給

- 広域上水道事業：水資源公社
- 地方上水道、中小規模上水道：自治体

2. 水資源管理制度の特徴

□管理主体の分散

- 1) 数量(建交部担当)、水質(環境部担当)
- 2) 水関連意思決定構造：水管理政策調整委員会
- 3) 生活用水供給：広域及び地方上水道

□流域管理体系の導入

III 上水道事業と現況と改善点

1. 上水道事業現況

□公企業と地方政府の運営

- 1) 独占運営体制による経営効率性の問題
- 2) 浄水施設の老朽、低調な稼働率の問題
- 3) 頻繁な人事移動による専門性、効率性、連続性の問題

□事業運営の構造的な問題

1) 上水道事業の地域的隔差

- 地理的環境による偏差が大きい
- 行政区別別運営による効率性
- 水源池のない場合、水道事業者の間で葛藤がおこる

2) 水係数量管理と地方上水道の開発

- 広域上水道供給の地域間非均衡性と
- 広域上水道の水配分葛藤
- 広域上水の供給の地域的偏重

□体系上の問題点

1) 広域上水道と地方上水道の二元化による問題点

- 水道事業者間重複投資、過剰投資
- ダム建設等水源池確保と環境破壊

2) 広域上水道事業者の権限強化

- 広域上水道事業者 = 中央政府という認識
- 地方上水道事業者の予算執行力不足

2. 国民の水道水に対する不信と上水道事業

□水道水飲用現実

1) 低い飲用実態と原因

- 飲用比率：約1%にすぎない
- 原因：消毒薬の匂い、上水源の汚染、老朽した水道管、浄水場運営に対する不信

2) 水道水関連社会的争点

- 安全性確保：ウイルスと原生生物検出
- 泉、井戸等の安全性論争
- 水道水フッ素化論争
- 水道事業民営化論争

□地方上水道の問題点

- 1) 老朽した浄水場
- 2) 自治体の予算不足による投資不足
- 3) 乾期、乾川化による用水不足の問題

□広域上水道事業の問題点



- 1) 広域事業者の無分別な水資源開発
- 2) 国策事業の執行を口実に地方政府を圧迫
- 3) 用水需要と水資源に対する情報の独占
- 4) 組織維持と組織利己主義

### 3. 地方上水道事業者の水質操作事例と問題点

#### □ウルサン(蔚山)浄水場の組織的水質操作

- 1) ウルサン市浄水場の組織的な水質操作と隠蔽(2004. 3. 11日付報道)
- 2) 言論報道と自体監査の結果事実と確認
- 3) ウルサン市と環境部の責任回避や押し付け

#### □中小規模の浄水場の水質操作、隠蔽と水道水不信

- 1) 広範囲に行われている可能性高い
- 2) 結果的に国民の水道水不信に一助
- 3) 公務員、公企業の信頼低下と上水道事業の民営化同調

### 4. 水道行政公開と参与拡大が必要である

#### □情報の独占と国民の不信

- 1) 水道事業者の水道関連情報独占
- 2) 行政の非民主性、非公開
- 3) 水道サービスと経営効率の低下
- 4) 飲むミネラルウォーター、浄水器市場の拡大による社会的費用の増大

## IV 韓国の水私有化論争

### 1. 公共部門の民営化と水私有化

#### □SOCに対する韓国的特殊状況

- 1) 電力、道路、鉄道、ガス等主要SOCの公企業化
- 2) 新自由主義勢力の民営化圧力
- 3) 公共部門の民営化による後遺症

#### □水私有化の影響

- 1) 経営効率性の提高、品質管理への期待
- 2) 料金引上げ、利潤極大化の追求
- 3) 労働力の専門性、施設投資、サービスの拡大

### 2. 水私有化論争

#### □水道水の信頼回復が優先

### 1) 水道水の信頼回復のための摸索

- 水質管理、浄水場管理
- 水道行政の公開：ウルサン水質操作の例
- 市民の参加する水道行政作り

### 2) 水道事業者に対する牽制装置の強化

- 水資源に対する情報公開と民主的行政
- 用水需要予測の妥当性、客観性、科学性の提高

### 3. 社会的合意なしの水私有化推進反対

#### □国家の水政策全般に対する社会的合意が優先

- 1) 水資源管理、確保、開発
- 2) 水資源統計
- 3) 水資源長期総合計画の再検討と再作成
- 4) 既存の統計に基づく無分別な水資源開発の禁止
- 5) 水政策に対する社会的合意の完了

#### □社会的合意以後始まった水私有化論争

- 1) 新自由主義的世界化の犠牲としての水私有化反対
- 2) 維持可能な成長を可能にする水供給体系の決定
  - 現行維持
  - 委託運営
  - 施設投資+委託運営
  - 完全な民営化、等

### 4. 水道事業者と民間団体との交流

#### □水道事業者と市民団体との交流が必要

- 1) 水道事業の客観性と公正性を管理監督
- 2) 公開行政と参与行政

#### □水道水市民会議

#### □中小規模の水道施設管理及び制度改善T/Fチーム

## V 結論

1. 国際投機資本とアメリカ主導の新自由主義に反対
2. 水道水に対する不信を認定し、克服のための努力を先行させるべきである
3. 水道行政の情報を公開する
4. 水政策に対する社会的合意が優先的である
5. 社会的合意の後、水私有化論議が必要である



## 公共部門の私有化阻止闘争、その意味と課題

ソン・ユナ（社会進歩連帯 諮問委員）

### 1. 公共部門の私有化阻止闘争の展開過程と意味

金融通貨危機以後、新自由主義構造調整の模範として烙印を押された公共部門労働者は、公共企業の私有化、労働現場に対する各種の弾圧、さらには労働者に対するイデオロギー的・政治的・道徳的攻勢の中で、即自的な怒りを形成してきた。その過程において公共企業の労働者は、生存権の奪還と公共性の意味に対する真摯な苦悩を拡張させてきた。すなわち、公共企業の売却反対・私有化阻止闘争は、直接的な人員削減の現実化、労働条件の悪化といった条件の中で、生存権を勝ち取るための闘争として発展し、さらには構造調整の阻止という国家権力との直接的な闘争の必要性として転化してきた過程にあったと言える。

#### 1) 1999年-2000年 闘争に関する簡略な考察

私有化阻止闘争が社会的議題として登場したのは、実際には1999年夏からだと言える。1999年9月、韓国電力・韓国重工業・韓電技術・韓電技工・原子力燃料・原子力研究所などの電力関連6社は、電力産業構造改編が会社の売却と私有化につながるという問題意識のもとで、共同闘争本部を結成し、11月には国家基幹産業私有化阻止汎国民対策委員会が構成された。実際のところ、共同闘争の経験が全くなく、上部団体が民主労総と韓国労総に二分化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あって、共闘本の闘争は思わしくなかった。その上、公共企業私有化の社会的問題点に対する認識は、進歩陣営内ですら広まっ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当時、市民団体は、公共部門の官僚性や天下り人事などを取り上げて公共企業の非効率性を強弁し、むしろ私有化を通じて効率化すべきだという論理が支配的な状況であった。

2000年8月、電力労組が規約を改訂し直接選挙制となり、新しい執行部が構成されることによって電力共闘本の拡大・改編のための論議が本格化した。韓通・鉄道・ガスなどの私有化対象会社へと闘争主体を拡張するための努力が続けられ、その結果、韓電・鉄道・ガスおよび政闘連盟を主軸とした韓国労総の公共労協と民主労総公共連盟が「公共連帯」を構成するに至った。公共連帯は国家基幹産業の私有化阻止、官治経営粉碎、一方的な構造調整阻止、中央労使交渉機構を勝ち取るなど4大要求案を掲げて出帆し、11月には汎対委も構成された。しかし、両労総の連帯の背後にあった電力と通信の両労組すら互いに信頼できない状況にあり、両労総間の実質的で信頼のある「連帯」は非常に困難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点は容易に予想することができた。公共部門の労働者の史上例を見ない総ストライキによって広まっていた闘争前線は、電力労働組合の3度にわたるストライキの留保と鉄道の合意によって一瞬にして崩れ、唯一韓国通信労働者のストライキだけが継続された。そのような状況は、闘争前線における連帯と信頼の問題に関する苦悩につながり、さら

には連帯闘争の目標と方向に関する苦悩を投げかけ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2) 2001年10月国家基幹産業私有化阻止共同闘争本部の建設と、鉄道・発電・ガス共同闘争の出発

鉄道・ガス・発電・地域暖房・高速鉄道・電力技術の6つの労組と公共連盟は、2001年10月31日に国家基幹産業私有化阻止共同闘争本部を設置した。新たな共同闘争単位が設置されるまでの紆余曲折は、それまでの2-3年間の闘争の歴史を徹底して反映する。共闘本建設のキープポイントとなっていた鉄道とガス、そして発電労組が上部団体を異にしているという条件下にあって、両労総間の連帯の問題は、その外枠を準備する段階から予想されていた難関にぶつかった。しかし、2001年の金大中政権退陣闘争とこれをとりまく論争、そして民主労総委員長の拘束の後、情勢的な突破口を開くことができずにいた労働運動陣営にあって、私有化阻止闘争を中心として闘争の突破口を開くべきだという問題意識は、きわめて迅速に拡張していった。特に50年にわたる御用企業の歴史を破り、はじめて民主労働組合を建設した鉄道労働者に対する信頼、鉄道労働者のストライキが発揮する情勢の効果に対する期待は非常に大きかった。発電労組の場合、民主労組建設・民主労総加入へと息を切らして前進してきた時間の中で、闘争の主体に対する期待と信頼も当然のことながら高まった。そのような過程の中で、鉄道・ガス・発電労組を中心に、一つの共同闘争が模索された。もちろん、鉄道とガスが韓国労総を上部団体としているという状況、3社とも実質的には新生労働組合であり組織的掌握力が弱いという点は、闘争における難題であり不確実性として働いた。

もちろん12月までの状況は、それまでの闘争における誤謬を繰り返す過程でもあった。闘争が展開される様相、闘争の争点、連帯の水位などを考慮するならば、「共同」闘争本部という名はあまりにも不似合なものであった。特に、闘争日程の分散により、連帯闘争が組織し難いという慢性的な病弊はそのまま受け継がれた。鉄道とガス関連法案は上程されるのか、上程時期はいつでどのように分散されるのか、どの労組も法案が上程されるかどうかによって、設定したストライキ闘争の可能性はいかなるものかなどが絶えず論争の主題となった。鉄道とガスを分離・打撃を加えようとする政権と資本の攻勢に引きずられながら、日程ともなう受動的な対処法案をめぐる論議が主軸となったのである。2001年、共同闘争は鉄道とガス産業の私有化法案処理の日程、その可能性の有無によって闘争の時点と闘争の水位を調節していくという様相を見せているに過ぎなかった。鉄道か、ガスか、分離か否かを占う過程において、結局のところ法案処理は2002年に留保され、共闘本所属の事業場は新たな局面を向かえた。

#### 3) 2002年闘争と私有化中断に対する広範囲な世論の形成

2002年1月27日、発電労組代議員大会において、2末3初闘争が電撃的に決定された。実際のところ発電の場合、ストライキを上程する際にピークタイムの夏を考慮に入れざるを得なかった。しかし、公共部門私有化および構造調整を阻止するためには、集中点を作ることが必要だった。さらには、すでに法案が通過した時点にあって、共同闘争の契機を通して私有化政策全般を中断させ、その中で発電売却の阻止、電力産業構造改編の中断に対する労働者の意志を結合させなければ



ならなかった。さらには、これまでのように国会の日程に左右され、それに合わせて日程を調整するといった『追従形』の闘争は成功し難いという事実を身をもって経験したからでもある。発電労働組合の決定により緊張力が高潮しはじめた。特に、私有化阻止が労働条件の改善、賃団協を勝ち取るという現場の具体的な生存権要求と具体的に結合していく過程でもあった。もちろん鉄道・ガス・発電共に、互いに対する疑いの念を完全には払いきれなかった。確かにわれわれが向後の労働組合の課題について苦悶しながら真剣に苦悩すべき時点ではあるが、連帯闘争において相手側を疑い、失敗の可能性を予想するその瞬間、その連帯の意味は失われてしまう。むしろ連帯の主体である自分自身を振り返って、その決意を基に連帯の力を督促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実質的な連帯の成果が発揮される。向後の発電売却および配電分割阻止闘争においてもっとも重要な点はすなわちその部分でもある。旧正月を過ぎてようやく3つの労働組合の共同闘争、共同ストライキの実質的な内容が決定された。共闘本は、「3つの労働組合の要求案が共に貫徹されるよう闘争する。また、3つの労働組合の要求案のうちの一つでも貫徹されない場合、そして公権力の投入という資本と政権の物理的弾圧が突発した場合、即刻連帯ストで対応する」という共同決意を確保した。2月25日04時、3つの労働組合の共同ストが宣言された。25日にガス労働組合協商が妥結し、この日の夜20時を期して発電組合員は散開闘争に突入し、27日07時には鉄道もまた協商を妥結した。

5600人の組合員中約5400人の参加という驚くべき記録をもって始められた発電労働組合のストライキは、当初の予想とは異なって38日と長期化した。電力産業の特性上、選択した散開闘争戦術は一糸乱れぬ展開を見せ、むしろ散開闘争に対する言論の扇情的な報道が、発電ストの原因である私有化政策の問題点を社会的に拡散させる効果として作用した。さらに家族対策委の活動は、私有化政策に立ち向かった労働者闘争の正当性を浮き上がらせた。発電ストライキの過程でもっとも重要な部分は、いわゆる「空間」に対する理解である。大部分のスト隊伍は工場を占拠したり組合員の空間を共有したりというかたちで表れる。しかし、散開ストは10-15人程度の少ない人員で構成され、視野と空間が縮小されざるを得ない。しかし、ストライキが長期化する過程で、発電組合員は全国の労働組合事務所あるいは研修所、市民社会運動団体の事務所に居住して生活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過程は新たな空間の拡大を意味するものである。労働組合運動が全国的に相まって社会運動全般が結合する過程において、私有化阻止闘争の正当性および私有化政策の問題点は十分に社会化されうるものであった。そのような発電組合員の経験がむしろ闘争が一つの敗北を経験し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にない迅速な組織力の回復を見せる現実条件を産み出し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もちろん、4月2日の復帰を基点に発電労働者は多くの苦痛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また、昨年度2003年鉄道労働組合は2度のストライキを敢行せざるを得なかったし、ガス産業構造改編法案が今年またしも国会に上程される可能性が高い。しかし明らかなのは南東発電の売却の留保、鉄道私有化の全面中断、最近では配電分割の中断などが検討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は、労働者の闘争の成果だという点である。また、私有化政策全般がぐらついている状況もやはり私有化の結果に対する国民的な憂慮が反映されたものだという点である。

## 2. 私有化政策の現況と今後の闘争課題

1998年から本格的に推進されてきた私有化政策が現象的には一息ついているように見える。主要公共企業が次々に私的独占の手中に落ちた状況ではあるが、発電・鉄道・ガスなど国家基幹産業の私有化政策は、政府と資本の一方的な攻勢をから逃れ、ある程度社会的論争の空間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もちろん私有化の遅延に関して「労働組合の強力な抵抗が負担となり、また市場の状況も良くない」という政府の一角の弁明もあり、ゆえに「政府が確固とした私有化政策の意志を見せるべき時だ」として私有化に対する圧力を加えている。しかし労働者の私有化政策中断要求が社会的世論へとつながり、すでに社会的な雰囲気は私有化に対して決して好意的では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発電の売却および配電分割、鉄道とガス産業の私有化政策は決して廃棄されたのではなく、発電売却とガス産業私有化政策は今なお争点となっている。さらには医療・教育・文化のみならず水という必須公共財の私有化政策が現在進行形という状況にある。

私有化政策が、市場の状況や政治的環境によってある程度の流動性を持つことはあったとしても、それが完全に廃棄されることは難しい。私有化政策がそれだけ政治的な性格を帯びており、新自由主義政策が維持される限り、私有化論理は新自由主義の中心に立っているからである。上で簡略に言及したように、これまで私有化政策が金融通貨危機と経済危機の代案として提起された側面がないわけではないとしても、新自由主義構造調整において自由化政策は、市場化・開放化展望の核心的な位置にある。韓国社会は国家が主導して資本発展を育成してきたので、国家資本・公共部門の位置は絶対的であり、核心的な産業領域を網羅している。それだけに、国家が所有する資本の領域を私的なものとして転換し、全面的に市場化・開放化すべきだという新自由主義論理は、私有化を中心に据えてそこに固執している。現在、私有化政策は、国家、すなわち公共的所有を私的な所有に転換すること、すなわち「売りさばく」という次元を越えている。国内外資本が要求する全面的な開放化に応じて開放の橋頭堡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のである。そうだとすれば、全面的な市場開放と自由化が進んでいく情勢にあって、私有化政策は今後どのような位置を占めるのか、どのように再稼働するのかについてより詳細に考え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まで私有化政策は法的攻防が中心となってきた。公共企業の位相のゆえでもあるが、私有化のための法改定をめぐる闘争、労働組合を中心とする対応だけが具体的な接点であった。私有化の問題が社会的な議題、国民的事案として確定されるまでに時間がかかるのもそのためである。しかし、2001年に法改定が完了した電力産業、公社として新たな道を歩くことになった鉄道事業を見ても、今後私有化をめぐる社会的争点は変化する。また、すでに社会的な議題として浮上した私有化政策を越えた公共的發展の展望に関する争点が新たに開かれつつある。

### 1) 市場化・開放化政策と自由化

政府の東北アジア中心国家建設の構想、経済特区の全国化、WTO・FTA協商などが、私有化政策と関連してどのような意味を持っているのであろうか。2003年7月に施行された経済自由区



域の場合、経済自由区域に指定された地域での教育と医療分野市場の門戸を開放している。外国資本を誘致するためならば、該当地域内の環境問題や労働の問題は簡単に切り捨ててしまうほど深刻な改悪の素地を含んでいる。1) 経済自由区域の問題は、それだけでも深刻であるが、経済自由区域に指定された地域において許容されていることが、その地域内の問題に限られたものでないというのが重大な問題となる。経済自由区域で許容される自律化・開放化の措置は、社会的に逆平等の論争を巻き起こすことになるであろう。国内の資本の立場からは、経済自由区域で施行された措置を全国に拡大させようとするであろうし、そのために経済自由区域は重要な橋頭堡となる。経済自由区域での教育と医療、文化の開放は、全国的な開放化の趨勢へと進むであろうし、環境と労働に対する最小限の法的責任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経済自由区域法通過後、大多数の地方自治体で我も我もと自由区域指定を望んでいるのもこのような現実を反証している。経済自由区域問題とともに提起されているのが東北アジア中心国家建設構想だ。

東北アジア中心国家構想は、投機的金融資本を自由に誘致するために、国内的な環境全般を変化させるためのものだ。投機的金融資本が流入したならば、これらが自由に活動できるように国内の法的・制度的・政治的環境を最適化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法的制度的改悪は、環境、人権、労働全般を包括する。今年2004年に満了するWTOサービス協定もやはり同様だ。WTOサービス協定は、12の条項を盛り込んでいるが、一言に12の条項とは言っても、それこそ一つの国家を揺さぶるほどの社会全般の変化をもたらすことも可能な内容である。東北アジア中心国家建設、WTOサービス協定が本格化される過程において、包括的な法の改編、すなわち改悪はすでに現実化している。韓日貿易協定をとって見ても、労働関連法諸般のとてつもない改悪の余地は十分であり、それによって労働市場の柔軟化、すなわち雇用不安は深刻な水準に至ると考えられる。韓日投資協定で、日本の財界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準じていないとして韓国の労働政策を強く攻撃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ある。無労働、無賃金原則の固守、1年以上の者に対する退職金支給条項の撤回、休日・休暇手当の義務化解除、不法争議行為に対する「迅速で厳正な」対応などがその内容である。

WTOサービス協定にはエネルギー産業と運輸産業全般の包括的開放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いくら私有化についての攻防を繰り広げたとしても、社会の世論が自由化を否定したとしても、経済自由区域、各種の投資協定とWTOサービス協定が締結されたならば、それらは有名無実なものとなるであろう。

そのように、公共部門の私有化は、市場化・開放化の攻勢が加速化するにつれて新たな形をとり

- 1) 「東北アジアのビジネス拠点地域」としての経済自由区域は「企業の経営および生活環境を国際基準に合った水準」に改善するという名目のもとで、資本におびたしい特恵を付与している。
- 労働者の基本権利剥奪：有給休暇の廃止、週休・生理休暇の無給化（法第17条第5項）経済自由区域委員会の審議・議決を経た専門業種に関して派遣業務の許容・許容期間の拡大（法第17条第5項）団体行動権の制限（法第19条）身障者・高齢者義務雇用の回避（法第17条1項）
- 環境規制に関する法律の免除：環境関連法律34件
- 租税徴収権の事実上の放棄：開発事業者に法人税、所得税、関税、取得税、登録税、財産税、総合土地税などを減免（法大15条1項）外国人投資企業の国税・地方税減免、国・公有財産の賃貸料減免

つつある。特に、国際的協約の場合、国内法を上回る効力を持つという点で、これまで韓国社会を揺さぶってきた論争は一瞬にして意味を持たない過去として転落することになる。政府と資本の立場では、社会的世論を避け、該当労働者の抵抗を避けながら法的・制度的整備を通じて実質的な目標を達成することになる。それゆえに私有化中断を要求してきた諸般の主体は、市場化・開放化の趨勢を読み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その中で新たな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至っている。私有化中断を中心に連帯してきた公共部門労働者は、市場化・開放化に抵抗する民主市民社会運動と積極的に結合すべきである。当面している教育・文化・医療・水市場の開放に抵抗する労働者はもちろん、環境破壊と人権の消滅に抵抗する多数の市民運動陣営と連帯すべきである。さらには市場化・開放化が一国家の基本的な自律性を侵害するに違いないという点において、この事案が国民的事案として拡大するように、先頭に立って努力する主体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 2) 労働市場の柔軟化、構造調整攻勢の強化

公共企業は個別の公共企業経営陣が労働組合と労働者を統制する前に、政府による政府からの統制を前提としている。政府と公共企業経営陣との間の関係を見ると、政府は個別公共企業に利潤中心の経営を要求しながら組織転換を要求する。特に政府は、賃金ガイドラインと定員制限などの予算の権限を握って全般的な投資を含む統制権を持ち、運営過程においても行政指針などを通じて強制力を行使する。経営陣に対し、実績による成果給を支給し、次期予算の増減を根拠に圧迫を加え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にあつて公共企業の経営陣は、労働者に対する直接的な統制を強化し、それは労使関係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最近、発電5社が競争システムへと転化し、補償体系、評価システムが重要になったのもこのためである。公共企業の効率性、民主化の指標として言及される会計情報の透明性の改善と公開、会計情報の電算化、経営情報システムの強化などの問題は、現実的には政府の管理下で私有化を準備する経営陣の実績を上げるための手段に転落するだけである。そのような統制構造が結局のところ人員削減、組織の統廃合、外注下請、顧客志向的・収益性中心の経営、現場統制の強化などとして現れている。

鉄道を挙げて見ても、私有化の争点は避けて通りながらも、労働に対する攻撃の手綱は緩めていない。似たような位置に処している公共企業における構造調整の様相もやはり深刻な水準にある。鉄道の場合、鉄道公社法が通過し、公務員の身分保障が解かれるようになると、正規職の整理解雇および非正規職化の可能性がむしろ高まっている。特に、運輸分野の外注化が推進されている。ソウル駅の新駅舎の28の窓口の中で、20の窓口の外注化が推進中であり、龍山駅は19の窓口のうち、12が外注化対象となっている。すでに昨年公開された鉄道庁の運輸分野の外注化計画では、2434人が外注化の対象となった。京春線と益唐安山・一山・果川線などは、駅全体が外注化の対象となっている。首都圏の電車車掌と輸送員業務もまた外注化の対象である。韓国通信の場合、2003年に5500人を名誉退職させた。勤続年数15年以上の者のうち「業務不適格者（D等級）、114（電話番号案内）分社で残留した女性組合員、運転電気防護などの非補職者やその他高齢者、低学力所持者」などがその対象であった。すでに1998年から2000年までに13500



人を強制退職、名誉退職させ、韓国通信契約職労働者7000人あまりを整理解雇および請負という形に替えてからいくらか経たないうちに行われたのである。

ソウル地下鉄の場合、2003年12月20日に、ソウル地下鉄労資が『21世紀地下鉄発展跳躍のための協約書』を採決した。この協約書は2006年までに2733人を削減し、外注委託と民間委託を拡大し、1日2交代制などに勤務形態を改悪する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る。結局のところ、地下鉄公社黒字経営計画のために労働組合が先に立って協力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ソウル地下鉄もまた、すでに1999年に1621人が削減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労働に対する攻撃、労働費用削減のための構造調整は日常的なことで、私有化の争点が生き残っている限り、この攻撃のジユリ（両脚を縛りそのあいだに棒を挟んでねじる刑罰）はいっそう強く締め付けられている。

発電と電力もまた交代制の改編、職務統廃合を通じて環境・建築・土木・土建などの少数職群の自然淘汰、業務分掌を通じた一方的定員調整、化学部を中心とした定員縮小など、直接的な人員削減の試みが続いた。また、計測制御部アウトソーシングだけでなく全事業所にわたって非核心業務をアウトソーシングしようとした。勤労基準法改悪によって休暇手当と女性組合員の生理休暇も廃止され、インセンティブと賞与給を差別支給し、組合員の領域にまで年俸制を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足りない人員でようやく現場業務を埋め合わせしているところに、オーバーホール工期短縮による労働の強度が強化され、経営革新精進大会・品質改善競進大会、各種の提案制度を通じて労働の強度が著しく増している状況にある。

私有化政策の中断が個別の事業場の熱望だけでは不可能のように、コインの両面の関係にある構造調整の中断要求もまた同様である。これまで私有化および構造調整をめぐる社会的対応は、国会法案をめぐる連帯以上の域に達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のが事実である。私有化に対する社会的争点を拡散するための連帯、構造調整政策をめぐる事業場間の実質的な連帯は不在であった。さらには私有化政策それ自体だけを見ても、これまで電力・発電・ガス労働組合を中心に形成されてきた対応秩序は、ここに至って孤立あるいは分散している。現在、私有化政策の中断に対する社会的世論は形成されているが、これを主導している核心主体の共同対応は微弱な状況にある。私有化を前提にした構造調整、さらには労働に対する攻撃を強化する構造調整に共同で対応する労働組合間の実質的な連帯、労働組合を越えた社会的連帯を落ち着いて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 The Privatisation of the Water System and Its Problems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LEE Won-Hyoo, Chairperson of Anti-Privatisation Committee

### 1. Introduction

Water is collected from nature and treated for specific use-purpose and re-released to nature after treatment following the use. The water processing system is a component of the overall wa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and rational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Water resource, being a public resource, should be accessible to all people on equal basis.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vision of quality water to all people. Water, however, is drying up across the world. The causes of the shortage of water are found in population explosion, rapid increase in the water usage, the greater need of water fo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urposes, and pollution of earth-surface water.

The work of the government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is dispersed among many different agencies of the government. The maintenance of the appropriate level of water reserve and the management of the river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quality and aqua-ecology system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river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dams and wide-area water supply system.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 which takes up two-thirds of the total water demand -- is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anagement of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is a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Resources, whi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local water provision.

The managerial responsibility for the provision of water lies with local governments, supervision the planning and maintenance of the water supply system, water pricing, and provision of water. The centr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planning and development of measures to address the planning agenda, and the technolog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the agencies involved in water



provision.

The waste water works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verall maintenance of the water resource. The management of the waste water works lies with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the responsibl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ome of the key issues that have arisen i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system and service are: inefficient management, the aging of the water treatment system, the drop in the water reserve, the shortage in the equipment for water quality control, shortage of staffing, the bureaucratic formalism in the management system,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efficiency of management arising from frequent personnel change.

Some of the key issues that have arisen in the management of waste water processing are: an absence of management orientation in the responsible agencies, the absence of (or deficiencies in) a long term management plan, the absence of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inancial needs, low priority given to waste water management arising from political considerations, imbalance in investment in waste water management system, excessive number of operation personnel among the functional staff, inefficient management of field office staff, the shortage of qualified staff responsible for water quality, and the frequent staff rotation.

The agenda concerning the water service is conditioned by the awareness of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ater and the problems found in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The current tendency in approaching the water agenda is to look to privatisation as the only way to address it. Privatisation of water -- and giving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e control of the water resource -- at a time when water shortage and the threat to biodiversity stemming from globalisation are emerging as one of the greatest global concerns is bound to aggravate the water crisis.

Privatisation of water takes the following forms: the privatisation of water treatment and supply and waste water management, the sale of bottled water, and dam construction. Privatisation of water, seen as the panacea for water shortage and effective utilisation, has come under amounting criticism and resistance due to price increase, degrading of water quality,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indiscriminate development.

This paper will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debate over privatisation of water and its problems, the various alternatives being considered, and the campaign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in response to the issue.

## 2. The Overall Water Situation in Korea

### A. Regional Water Supply (1999)

	Rate of supply (%)	Water usage per person per day (litre)	rate of seepage (%)	unit production cost (Won/Ton)	Price (Won/Ton)	Price Increase Factor (%)
Nation-wide	86.1	388	16.1	535.3	396.9	34.9

### B. Management Situation

The local water management has maintained a debt-to-asset ratio, in 1999, of 33.2%, making its financial situation better placed than other local public corporations. Local authorities have secured investment through fixed-term bond or self-financing. In totality, the water authorities have obtained short-term profit, but there are great differences among the individual agencies, as 45 bodies recorded profits and 47 bodies recorded deficit in their operation.

### C. The Rate of Waste Water Service Infrastructure Provision (2002)

	Population	Facility Capacity (1,000 tons/day)	Covered Population	Waste Water Service Coverage (%)		Financial Self-reliance(%)
				Treatment facilities	System Coverage	
Nation-wide	48,518,573	20,233	36,760,736	207	75.8	59.4

### D. Budget and Debt in Waste Water Management for Differing Accounts (1999)

	Total Revenue (million won)	Account Proportion (%)					Total Debt (million won)
		Central Government Fund	Allocated Fund	Local Government Fund	Income from User Fee	Contribution by User	
Nation-wide	2,668,799	6.1	19.7	45.6	19.0	9.6	2,055,169



### E. Privation of the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at the end of 2000, the investment need of 3.7 trillion won for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development. It intends to construct 68 new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by private investment of 1.75 trillion won. As of January 2001, 82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treating 7,133.6 ton per day, are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by commissioning. 48%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38.7% of the total treatment capacity is managed by private enterprise. A total of 7,300 people are employed in the privately managed facilities.

### 3. Problems in the Privatisation Drive

Privatisation of water is bound to cause problems in the key features inherent in water: public good character, safety, transparency, and easy access. The appropriateness of mandating private enterprises -- whose principal objective is profit making -- the responsibility for water processing and treatment must be determined on a set of long term objectives. Many overseas cases and experiences have pointed to problems arising from privatisation: explosive increase in water price and avoidance of re-investment. Any water policy must be founded on the understanding of water as a natural resource essential to the very maintenance of life. The following problems of privatisation have been widely recognised:

#### A. Damage to public good character:

Water is public property which should not be made into a means for private profit making; privatisation turns water into a means and object for private profit seeking.

#### B. Damage to safety

Private enterprises which are given the task of managing water through privatisation could, because of their size and subsequent power, escape the scope and reach of public control and supervision, including the policy objective of the government. In this way, they can threaten the life of the people.

#### C. Damage to transparency

The loss of effective means to regulate powerful private enterprise could lead to irrevocable environmental damage, including water pollution.

#### D. Damage to easy access

Privatisation will bring about forcing the users to bear the cost of facility investment, leading to drastic user-fees. This will give rise to aband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guarantee a fair distribu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welfare of the poorer segment of the society.

#### E.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of private enterprises, whose principle objective is profit seeking, to be more responsible than the government in their concern for environmental integrity. Water must remain public asset and public agencies, operating on the principles of public service accountability, must be given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integrity, water quality, provision of safe water.

### 4. Alternatives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Water Processing and Treatment Facilities

It is true that economy of scope is difficult to obtain with public goods and that there is social concern for inefficiency in the operations of the facility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government is insisting on a productivity-centred approach which calls for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privatisation. The proper response, however, should lie in efforts to bring about effectiv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based on the commitment to the essential features of water and water service. Following concrete alternative proposals should be considered.

#### A. Adjustment of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area management system

1) The local Environment Offi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be mandated the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level or new water systems management agency should be created for area-based water



resource management.

2) The water systems management bodies should be made into management system rather than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avoid rigidity and inefficiency. They should be converted into specialised bodies for water management.

3) Water system management bodies should be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set water quality targets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areas and to support the financial requirement of the various facilities, and technical development tasks for processing and treatment, on the basis of water fee collection, fee charging on environment-damage causing agents, environment tax,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 B. Adjustment of the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Systems

1) The Wide-area water service works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development of water catchment. This will induce the removal of region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The adoption of a single wide-area water price will enable the introduction of parity in the cost of water catchment.

2) Create wide-area management of the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collection system along the natural water course-way system. This will minimise the regional conflicts over water. Integrated agencies set up on the basis of the natural water course-way systems will be mad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work involved in water supply to users. The cost of water delivery should be born by users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user-pays and pollution-causing agents. In order for this proposal to work effectively in terms of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 which should be accessible to all people -- the cost allocation for the treatment of waste water (adjustment of externalities) should be undertaken in a rational manner.

3) The integrated water works agencies, set up on the basis of natural water course-way systems, should be mandated to operate the waste water management system. This will enable the adjustment of externalities and cost allocation involved in water supply within a given area. This calls for a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fresh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management within areas bounded by natural water course-way systems.

4) Another proposal is the creation of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joint management of water. This proposal is the simplest approach which incorporates the existing water delivery and waste water management system. The localities vicinity of a given natural water course-way could be brought together for joint management. The participating localities would share in taking up the cost of total water supply and waste water treatment and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various needed facilities.

#### 5. The Response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is requir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campaigns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 to prevent privatisation of water is a struggle to defend the life of the people.

A. Build a broad alliance to prevent the commission private enterprise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resh water delivery and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the commissioning of the Chilseo Water Processing Plant need to be taken up as the basis for greater campaign against privatisation of water which is the life line of the people.

B. Development of various campaigns and activities to build the campaign into a broad society-wide struggle

C. Constant monitoring of the facilities which have already been commissioned to private enterprises.

D. Promotional activities directed at the National Assembly, local councils, and the general population

E. Public awareness activities: public hearings and forums, and citizens' recall of elected officials



## The Social Significance and Impact of Privatisation of Water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 Movement  
Kim Nak-joong, Coordinator, Green Alternatives Unit

### I Neoliberalism and Privatisation of Water

#### 1.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Neoliberalism

#####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ism

- 1) Free trade without tariffs
- 2) Globalisation of the market
- 3) Privatisation of public bodies and public corporations

##### Impact of neoliberalism

- 1) Global inequalities
- 2) Consolidation of the influence of transnational speculative capital
- 3) Consumer society
- 4) Global environment destruction

#### 2. Neoliberal environment destruction and privatisation of water

##### Impact of environment destruction

- 1) Expansion in the international trafficking of wild animals
- 2) Destruction of forests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species
- 3) War to secure fossil fuel (petroleum)
- 4) Commodification and privatisation of water

##### Commodification and private ownership of water

- 1) Attitude to water: where does the responsibility for supply and use of water lie
  - Basic need versus basic right
  - Basic need: provision of water through market and profit seeking (privatisation)
  - Basic right: equal access to and use of water provid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 2) Hague International Water Forum, 2000: designated water as basic need

#### 3. The Impact and Disputes Related to Privatisation of Water

##### The Privatisations of water in the UK and its impact

###### 1) Privatisation of water and increase in water fee

- Water fee increased on average by 44% following the privatisation of water in 1989
- Water charge increased by 109% between 1989 and 1995
- Profit rose by 605% between 1989 and 1995

##### Dispute over international rivers and water ways

- 1) Nile: conflict between Egypt and Ethiopia
- 2) Jordan: Syria, Jordan, Israel
- 3) Euphrates, Tygris: Turkey, Syria, Iraq
- 4) Mekong: China, Laos, Vietnam, Bangladesh

### II Water resource and water policy in Korea

#### 1. The use of water resource and water policy

##### The current situation of water resource (1998 statistics)

###### 1) The total water resource and the water usage

- Annual water resource volume: 127.6 billion tons
- Total water use: 33.1 billion tons (26%)

######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rainfall

- Average annual rainfall: 1,283mm (1.3 times the world average of 973mm)
- Average annual rainfall per capita: 2,705m<sup>3</sup>, one-tenth of the world average of 26,800m<sup>3</sup>

##### Water policy

###### 1) Supply-oriented water policy (as of 2002)

- 15 multi-purpose dam (total water storage: 18,151m<sup>3</sup>)
- 1,214 large-sized dams (the 7th in the world, no. 1 in terms of dam-density)
- Plans to build 27 more dam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Long-term Dam Construction plan)
- Plans to build 2,451 reservoir (the third 10 year plan for



agricultural water,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 State and Public Corporation-led Water Supply

- 0 Wide-area fresh water supply work: Water Resource Corporation
- 0 Local area and small-to-medium fresh water supply work: local governments

2.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Dispersion of the management bodies

- 1) Water volum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ater quality: Ministry of Environment
- 2) Decision making body on water matters: Water management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 3) Household water supply: wide-area and local water supply system

Introduction of water course-way area management system

III The status of the fresh water supply works and areas for improvement

1. The status of fresh water supply works

Management by public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 1) Issues of management efficiency arising from the monopoly management system
- 2) Aging of the refinement facilities, low rate of operation
- 3) Issues of specialisation, efficiency, and continuity due to frequent personnel change

Structural problems in the operation

- 1) Regional differences in fresh water provision works
  - 0 Wide differences arising from geographical environment
  - 0 Difference in the level of efficiency among the different administrative units
  - 0 Conflicts between water management units in the areas where there is no natural water source
- 2) Management of water volume in the water course-ways and local fresh

water development

- 0 Regional inequalities in the supply of wide-area fresh water provision
- 0 Conflicts in water allocation among wide-areas
- 0 Regional concentration of wide-area fresh water supply

Systemic problems

- 1) Problems arising from the two-tier system of wide-area water works and local area water works
  - 0 Overlapping and excessive investment by different water development bodies
  - 0 Securing water source through dam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destruction
- 2) Increasing powers of wide-area water works bodies
  - 0 The perception that wide-area water works bodies are the central government
  - 0 The lack of budgetary resources and low staff level among the local-area fresh water supply works

2. People's distrust of tap water and fresh water supply works

Level of tap water drinking

- 1) The causes of low level tap water drinking
  - 0 Level of tap water drinking: approximately 1%
  - 0 Causes/reasons: smell of treatment chemical, pollution of water source area, aged water pipes, distrust of the refinery facilities

2) Social issues surrounding fresh water supply

- 0 Securing safety: detection of viruses and micro-organisms
- 0 Dispute over natural wells
- 0 Dispute over fluoridisation
- 0 Dispute over privatisation of water works

Problems in local-area fresh water works

- 1) Aged refinery facilities
- 2) Shortage of investment due to local government budgetary constraints
- 3) Problem of water volume due to dry spells and drying up of rivers



□ Problems of wide-area water works

- 1) Indiscriminate water resource development by wide-area water-works bodies
- 2) Pressuring of local governments on the pretext of carrying out national-level policy programmes
- 3) Monopoly of information concerning water demand and water resources
- 4) Organisational self-perpetuation and self-interest

3. Cases of manipul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water quality by local area fresh water works bodies and their problems

□ Systematic water quality manipulation by Ulsan refinery facility

- 1) Systemic water quality manipulation and efforts to hide by the Ulsan water refinery facility (reported by media on March 11, 2004)
- 2) Verification by media reports and internal investigation
- 3) Blaming the other by the Ulsan city authorit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quality manipulation by small-to-medium sized water refinery facilities and distrust of tap water

- 1)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wide spread manipulation
- 2) Contributes to the already pervasive public distrust of water quality
- 3) Low level trust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corporations, contributing to the push for privatisation of fresh water supply works

4. The need for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the water administration

□ Monopoly of information and distrust of people

- 1) Monopoly of information on water works by water works bodies
- 2) Lack of democracy and disclosure in the work of administration
- 3) Drop in the service and management efficiency in water works
- 4) Increase in social cost with the increase in bottled water and personal water refining equipment

1. Privatis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sation of water

□ Special features of social overhead construction

- 1) Public corporatisation of major social overhead construction, such as electricity, road, railways, gas, etc.
- 2) Growing privatisation drive by the neoliberal forces
- 3) After-effects of privatisation of the public sector

□ The impact of private ownership of water

- 1) Expectation of enhancement in managerial efficiency and quality control
- 2) Increase in price and maximum profit-seeking
- 3) Enhancement in specialised expertise, facility investment, and services

2. The dispute over privatisation of water

□ Priority need for restoration of trust in tap water

- 1) Efforts to restore confidence in tap water
  - Water quality management, management of refinery facilities
  - Disclosure of water administration: the case of water quality manipulation in Ulsan
  - Creating new system of water administration based on participation of the people
- 2) Strengthening the systems of check on water works bodies
  - Information disclosure on water resources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 Feasibility, objectivity, and scientificity of estimation of water demand

3. Oppose water privatisation without social consensus

□ Need for social consensus on the overall state policy on water

- 1) Securing and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 2) Water resource statistics
- 3) Review and rewrite of the long term comprehensive plan for water resources
- 4) End to indiscriminate water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the

IV The dispute over privation of water in Korea



current statistics

5) Securing social consensus on water policy

- Start debate on privatisation of water after securing social consensus on water policy
  - 1) Oppose privatisation of water undertaken as a part of neoliberal globalisation
  - 2) Develop a water supply system that make sustainable growth possible
    - 0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practice
    - 0 Commissioning private bodi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 0 Facility investment and commissioned operation
    - 0 Complete privatisation

#### 4. Exchange between the water works bodies and civic organisation

- The need for exchange between water works bodie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
  - 1)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objectivity and fairness of water works programmes
  - 2) The meaning of open administration and participatory public administration
- Citizens forum on water
- Taskforce on small-to-medium water facility management and reform of the system

## V Conclusion

1. Oppose transnational speculative capital and the U.S.-led neoliberalism
2. Initial effort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lack of confidence in tap water
3. Public administration of water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4. Priority for social consensus on water policy
5. Discussion on privatisation of water after securing social consensus on water policy

## The Struggle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SONG, Yoo-Nah

(Advise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1. The Progress in the Campaign to Prevent Public Sector Privatisation: significance

The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have been regarded as the poster-kids of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day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y have developed a sense of anger against the privatisation drive, the various repression at the workplace, and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ethical attacks against workers. In the due process, the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have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defend the right to livelihood and the meaning of public good and service. The campaign against the sale of public corporation and privation developed into a struggle to defend the right to livelihood in the context of immediate retrenchment and aggravation of working condition. The process has been one of evolution towards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state power in the effort to prevent structural adjustment.

#### 1) Brief Overview of the Struggles in 1999-2000

It was in the summer of 1999 when the struggle to prevent privatisation emerged as a social agenda. In September 1999, the unions at the 6 electricity sectors -- the Korea Electricity Power Corporation, Korea Heavy Industries, Korea Electricity Technology Corporation, Korea Electricity Equipment Corporation, Nuclear Fuel Corporation, and the Nuclear Energy Research Institute -- came to form a "joint struggle committee, on the basis of a common recognition that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electricity industry would lead to the sale of their workplace and privatisation. Later, in November, a broad Nation-wide People's Committee to Prevent the Privatisation of Strategic State Industries was formed. Until that time, "joint struggle" was unheard of in this sector. And the fact that the unions were affiliated to the two rival national centres of trade union movement -- namely, the KCTU and the FKTU -- meant that a joint struggle committee did not even feature in the considerations. Furthermore, the awareness of the social problems related to



privatisation of public corporations was not clearly established even among the progressive groups. At the time, the various civil society groups focused on the inefficiency of the public corporations brought about repeated scandals concerning the bureaucratic natur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cynical political appointments for high posts in the public corporations. They were apt to entertain privatisation as a means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public corporations.

The trade union at the Korean Electricity Power Corporation came under a new leadership based on the reform of its constitution that introduced a direct plebiscite of members of the election of the union's leadership. This provided the opportunity and momentum to embark on the expansion and re-organisation of the "joint struggle committee". Efforts were made to draw in unions in the Korea Telecom, the Korean Railways, and the Korea Gas Corporation, which were also subjected to privatisation drive. As a result, the various unions scattered in the two national confederations of trade union movement came to form "Public Sector Solidarity". The "Public Sector Solidarity" was launched on the basis of four common demands: prevent privatisation of the strategic state industries, liquidate the government's political influence in the management, prevent the unilateral structural adjustment, and secure central labour-management bargaining forum. I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Nation-wide People's Committee to Prevent the Privatisation of Strategic State Industries in November. However, the unions at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the Korea Telecom, which had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lidarity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al centres of trade unions, did not have a strong basis of mutual trust. As a result, it would have been quite obviou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substantial and trust-based "solidarity" between the two national centres. The "battle line", which came to be known as an unprecedented general strike of public sector workers, collapsed with three repeated postponement of strike action by the union at the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the agreement struck at the Korean Railways. The workers of the Korea Telecom were alone in going ahead with a strike. The situation led to a serious review of the issues of solidarity and trust in the common battle front, and the nature of the objectives and orientation of "solidarity struggle".

2) The formation of the Joint Struggle Headquarters for the Campaign to Prevent the Privatisation of Strategic State Industries (October 2001) and the Launching of a Joint Struggle by Unions at the Railways, Electric Power, and Gas

The six unions at the Korean Railways, Korean Gas Corporation, the Local Thermal

Heat Corporation, the High Speed Train Construction Corporation, the Korean Electricity Technology Corporation and the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and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s came together on October 31, 2001 to launch a "joint struggle headquarters" to resist the privatisation of the strategic state industries. The var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bringing the joint struggle into formation reflected the problems that had coloured the struggles in the previous 2 to 3 years. The three major unions -- the Railways, Gas, and Electric Power -- had been affiliated to different 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s. Given this, the effort to shape the structure of solidarity between the two national centres came into immediate -- albeit, anticipated -- problems. The trade union movement which had found difficult to create a breakthrough in the situation -- conditioned by disputes over the decision to launch a struggle aimed at bringing down the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 Jung and the arrest and imprisonment of KCTU president -- was gripped with urgency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situation via the struggle to prevent privatisation. The confidence in the railway workers, who had established a democratic union after 50 year history of yellow unionism, and the anticipation of the impact of a railway workers' strike on the situation, were extremely high. There was also a high expectation and confidence projected onto the workers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aving lived through the breathless development involving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trade union and the decision to affiliate with the KCTU. This set the background to the efforts to organise a joint struggle among the unions at the Railways, Electricity, and Gas. The fact that the unions at the Railways and the Gas were affiliated to the FKTU, and that all of the three unions were, in substance, nascent unions, and were weak in their command over the whole of the membership and organisations, remained the key impediment and source uncertainty in the campaign.

The situation leading up to December was one of repeating the various errors of the previous struggles. Given the shape of the struggle, the issues at stake in the struggle, and the level of solidarity, the "joint' struggle headquarters" was close to a misnomer. The chronic problems of spaced out timing of the campaign schedule among the different unions, thus making the effort to organise solidarity struggle, remained a key impediment throughout the effort. Were the bills concerning the restructuring of the railways and the gas going to be tabled at the National Assembly? When would they be tabled, how dispersed would they be? Would each of the unions be capable of launching a strike if and when the relevant bill was



tabled? These were some of the excruciating points of debate throughout the campaign. They were, in other words, dragged around by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which were seek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Railways and the Gas to separate them for easy strike. The discussions were dominated by reactive response predicated on the timing of the evolution of the situation. The "joint struggle" of 2001 did not go beyond coordinating and adjusting the timing and the level of the struggle in response to the anticipated timing of the tabling of the bill aimed at privatising the Railways and the Gas. The tabling of the bill, however, was postponed to 2002 amidst all the guessing work over which would come first, the Railway or the Gas, and over the question of separate or simultaneous tabling of the bills. Following the postponement, the unions which came together under the "joint struggle headquarters" came to face a new situation.

### 3) The 2002 Campaign and the Development of a Broad-based Public Opinion Calling for an End to Privatisation

On January 27, 2002, the Delegate Conferenc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orkers Union adopted a schedule of campaign that would culminate in end-February and early March. The union was aware of the need to avoid the strike breaking out in summer, the peak period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 marking the deadline. The union, however, had to set a focal point -- in terms of timing -- to generate the momentum of the campaign aimed at preventing the privatis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public sector. The unions had to create a moment for joint struggle to put an end to the privatisation policy at a time when the bill had already been passed and bring together the determination of all the workers to prevent the sale of the power generation plant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union was aware of the difficulty in organising a campaign in reaction to the timing of the development dictated by the other side, such as, the schedule of parliamentary action.

The resolution of the Power union began to generate tension. It had also brought different types of issues together into one time-table: the objective of preventing privatisation came to join the momentum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round dealing with issues closer to the worker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However, the three unions -- the Railways, the Gas, and the Power -- were not able to throw off their 'distrust' of each other. It must be realised that the moment the discussion is coloured by suspicion about the commitment of others and anticipation of possible failure, the very significance of solidarity is already

undermined. The very actor which comes to a forum where solidarity is to be forged needs to gather others together to feel the strength of solidarity. Only in this way can substantial solidarity come into fruition and generate the desired impact. Thi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preparing the campaign to prevent the sale of power generation plants and the compartmentalisation of the transmission/distribution system into separate entities.

Only after the Lunar New Year did the three unions come to a common understanding for joint struggle and joint strike. The "Joint Struggle Headquarters" resolved to "struggle to secure all the demands of the three unions, to launch immediate solidarity strike action in case the demands of one union are not realised or if the capital and government set out to repress the campaign physically by mobilising the state's coercive power". The joint strike of the three unions was declared on 4 o'clock in the morning of February 25. The negotiations at the Gas came to a settlement on Feb. 25, the Power union, at 8 p.m., directed its members to disperse in continuation of the strike, and the Railways reached an agreement at 7 a.m. Feb. 27.

The strike by the Power union, which saw 5,400 members out of the total membership of 5,600 joining the strike, lasted, beyond all anticipation, 38 days. Because of the particularitie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dispersed strike action" was maintained under strict discipline. The sensationalism of the media coverage focusing on the "dispersed strike" had the effect of generating a broad public debate about the cause of the strike and the problems in the privatisation policy. The actions and activities of the Family Taskforce, organised by the family members of the striking workers, gave voice to the legitimacy of the struggle of the workers against the privatisation policy.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the Power strike was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pace". Most of strikes take the form of occupying the factory space where the striking workers share a given space. But, the "dispersed strike" brought the striking workers into groups of 10 to 15, limiting their horizon and space. However, as the strike continued on, the groups of striking workers sought sanctuary in the offices or retreat facilities of un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 offices of various civil society groups, where they were able to secure rudimentary living condition. This was a process of the expansion of a new space.

In the course of "dispersed strike action" spreading out throughout the country



(through the journey of the striker worker groups) and linking up with various different social movement groups, a new momentum was created for the legitimacy of the struggle to prevent privatisation and for creating understanding about the problems in the privatisation policy. The experience the striking workers had in the course of the strike, which came to an end in a kind of defeat, enable the faster than expected restoration of the organisational capacity following the defeat.

The striking workers were subjected to enormous suffering following their return to work on April 2. The Railways had to strike twice in 2003, and the government is poised to table a bill for restructuration of the gas industry.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current situation, featuring the postponement of the planned sale of the South-east Electric Power Generation Corporation, the halt in the privatisation drive in the Railways, and the recent policy review for possible halt in the compartmentalisation of the transmiss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represents a victory for the struggle of workers. Furthermor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overall privatisation policy is shaken at its very foundation reflects the volume and height of people's widespread concern over the consequences of privatisation.

## 2. The Current Status of the Privatisation Policy and the Future Struggle Tasks

The privatisation policy which had been sweeping through the nation seems -- in appearance -- to have come to a lull. While most of the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handed over to private monopolies, the privatisation of the Power, Railways, Gas, and other strategic state industries, seems to have escaped the blind drive orchestr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and brought into the domain of social debate. Some in the government note that the strength of the union resistance was difficult to overlook and that the market conditions were not favourable in pushing ahead with privatisation to explain the delay in the privatisation. On the other hand, some claim that this is the very moment when the government should push ahead with privatis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clearly its commitment to the privatisation agenda.

The demands of the workers to bring an end to privatisation policy brought about the generation of strong "anti-privatisation" public opinion. The current social mood is not at all favourable to privatisation. However, the plan and policy to sell off the electricity power plants, the compartmentalise the transmission division for

sale, the privatisation of the Railways and the Gas, have not be all together shelved. The sale of the power plants and privatisation of the Gas industry are still hotly debated issues. The privatisation agenda has, also, entered into a new phase having broadened the scope of privatisation to include health and medical service, education, and cultural services, and water, the quiescent public good.

Privatisation policy may go through ups and downs as it courses through the fluctuation in the market situation and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t is an agenda which would be difficult to abandon all together. It reflects the fact that privatisation is very much a political agenda. Privatisation remains at the heart of neoliberal agenda -- thus privatisation plan will continue to linger on ready to raise its head as long as the neoliberal agenda remains in currency. While it may be true that privatisation was brought onto policy stage as a measure to counter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t stands, however, as a core component of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together with marketisation and liberalisation.

The state was the cultivator of the capital development in the Korean society. As a result, the status of the state capital and the public sector has been absolute spread through out the core industries. Neoliberalism is adamant that the areas dominated by state capital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other playing ground for private capital, to be brought under the discipline of market and liberalisation.

The privatisation agenda goes beyond transforming the public assets under public ownership into private assets under private ownership. That is, it is more than just selling the assets off. It is perceived as a pathway for liberalisation, for the interest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interests. What will be status of the privatisa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ed market opening and liberalisation? How will the privatisation policy be brought back on the stage?

Until now, the privatisation policy has been subject of a debate over legislative action. As the object entities are public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 their privatisation had to be triggered by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So the early trade union actions have focused on the legislative amendment. This, also, explains why so much time was taken before privatisation was developed into a social agenda, an issue that affects all the people across the country. However the matrix of social debate over privatisation is bound to shift. This is clearly seen in the cases of the Electricity and the Railways, where the Power bodies have been made into corporations with the legislative amendment in 2001 and where the Railways is expected to be made into another corporation. The social debate is bound to shift



even further -- from just focusing on whether it is right to privatise or not -- to become a debate about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public sphere and public good.

#### 1) Marketisation-Liberalisation and Privatisation

What implication will the government's plan to shape Korea into a Northeast Asian hub, nation-wide spread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WTO and FTA negotiations have on the privatisation agenda?

The "free economic zones", which came into effect in July 2003, introduces market liberalisation for education and health and medical care in the designated areas. The "free economic zone" regime contains the potential to remove all environmental and labour regulations in the name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sup>1)</sup> While what is contained -- or what is allowed to take place -- in "free economic zones" are serious in themselves, the real seriousness lies in that they will not be contain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zones". The various liberalisation measures and privileges introduced in the "zones" will raise a heated debate o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outside the boundary. The domestic capital would be intent on spreading what comes to be in currency to the rest of the country. The "zones", therefore, are important launching pads for a nation-wide liberalisation. The liberalisation of educ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1) "Free Economic Zones", defined as Northeast Asia business platform provides extensive privileges to capital in the name of improving the "business and life environmen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Suspension of the basic labour rights: the abolition of monthly paid leave, making weekly and mensuration leave unpaid leave (Article 17 Paragraph 4); introduction of "labour supply agency" workforce for all professional categories approved by "free economic zone committee", and expansion of the permissible period for the use of "labour supply agency workforce" (Article 17 Paragraph 5); and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rticle 19); and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of mandatory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older-age workers (Article 17 Paragraph 1).
- Exemption from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a total of 34 laws and regulations
- Abandonment of the power to collect tax: exemption or reduction for corporate tax, income tax, customs duties, asset purchase tax, registration fee, property tax, and general land tax for development bodies (Article 15 Paragraph 1); and exemption or reduction for national tax and local tax, and decreased fee for the rent of state or public assets for foreign invested firms.

introduced in the "zones" will be amplifi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re will be challenges against the environmental and labour regulations whose enforcement is suspended in the zones in the rest of the country. This is already coming into reality as various local governments are rushing in their ap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zones".

The Northeast Asia business hub plan of the government is another source of problems. It call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general domestic environment to attract speculative financial capital. This would mean optimising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environment for freedom of activity for the speculative financial capital.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labour related regulations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wind-down regime.

A similar prospect is foreshadowed in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scheduled to reach conclusion by the end of the year. While there are 12 area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their impact is capable of a wholesale transformation of a society.

The prospect of drastic regres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 in parallel with the Northeast Asia business hub plan and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 is already coming into reality. Th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urrently under discussion, contains windows for serious negative revision of the various labour law regulations. It will accelerate the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aggravating employment insecurity.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include liberalisation agenda for the energy industry and transportation industry. The intense debates over privatisation and the strong public rejection of privatisation drive will come to nought if the "free economic zones", the various trade or investment agreements, and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were come into force. The privatisation of the public sector is poised to enter into an entirely new terrain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broader marketisation and liberalisation drive.

The fact that international treaties have greater status than domestic laws means that all the debates which had shaken the society recently will be made meaningless. For the government and capital, the international commitment is an avenue to bypass public opinion and pressure and to shove aside the resistance of the affected workers, in completing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configuration they have so earnestly sought after.

The various actors who have struggled to bring an end to privatisation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trends towards marketisation and liberalis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new round of battles in the changed terrain. The public sector workers who have successfully united in solidarity against privatisation need to link up actively with all the social movements which are struggling against marketisation and liberalisation. In the process, they have to link up with other workers who are resisting the liberalisation of education, cultur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he privatisation of water. At the same time, they have to link up with the various civil society actors who are struggling against the environmental decimation and human rights degradation. They must struggle in the forefront of the campaign realising that marketisation and liberalisation will infringe upon the basic autonomy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to elevate the whole issue into a broad nation-wide concern.

## 2) Aggressive Drive for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and Structural Adjustment

Public enterprises are subject to control by and from the government, before the management's control of the trade unions and workers come into sight. The government has been pressuring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enterprises to orient their operations toward profit making and to undertake the necessary organisational reform for this re-orientation. The government utilises leverages such as wage guidelines, staff level caps, and budget allocation powers, to exercise comprehensive and direct control over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enterprises.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performance/merit based salaries for the management, and pressure them with the carrot and stick of budget cutback or boost. The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s compelled to step up its direct control over the workers, creating a direct impact on the labour-management relations.

The prominence of the new remuneration and evaluation systems in the five electric power generation corporations stem from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competition along the lines dictated by the government. Efficiency, transparency, establishment of computer database for accounting information, the consolidat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described as the democratic indicators -- have become the instruments to overhaul the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privatisation. The system of control is leading to workforce downsizing, organisational consolidation, outsourcing, customer-oriented, profit-oriented management, and consolidation of workplace control.

A similar phenomenon is found in the Railways. While the privatisation agenda seems to have been shelved, the attack on labour is carried out unrelentingly. With

the passage of the law for the creation of Railways Corporation, and thus the release of railway employees from the public official status, there is a heightened possibility of redundancy dismissals against the permanent workforce and their replacement with irregular workforce.

There is a rapid process of outsourcing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20 ticket counters out of a total of 28 in the new station building of the Seoul Station is listed for outsourcing. In the new Yongsan Station, 12 out of 19 ticket counters are listed for outsourcing. The outsourcing plan of the Railways, made public last year, calls for outsourcing affecting 2434 posts. The entire stations in the KyeongChoon line, Bundang, Ansan, Ilsan, and Kwacheon line are subject to outsourcing. The conductors and cabine attendants in the capital regional train service are also subject to outsourcing.

In the case of the Korea Telecom, a total 5500 employees were driven out of their jobs through "voluntary" early retirement. Those workers who were assessed to be "unqualified for posts" among the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15 years, the women employees who survived the spin off of the telephone directory assistance service, employees servic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security,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low education qualification were the target "voluntary early retirement". This followed 13500 redundancy dismissals between 1998 and 2000 and the retrenchment of some 7000 contract workers (their work outsourced to 'service' contractors).

In the case of the Seoul Subway Corporatio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signed an "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ubway in the 21st century" on December 20, 2003. This agreement calls for reduction of the workforce by 2773 by the end of 2006, an expansion of outsourcing of services and commissioning of private contractors. It als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two shift work day system. The agreement contains the commitment and cooperation of the trade union for the profit agenda of the Corporation. Seoul Subway had, in 1999, retrenched 1621 employees. The attack on the labour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aimed at reduction in the labour cost have become routine agenda in the public sector entities. It is likely to become even more vicious as long as privatisation agenda remains in force.

There has also been attempts to retrench the workforce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The reconfiguration of the shift system, the consolidation of job assignments, the phasing out of some work categories, such as, environment,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staff level adjustments through redefining of job assignment, reduction of staff levels in specific units have all been cases of downsizing of the workforce. This has been combined with outsourcing of the computer control and non-core activities in all the field offices and stations. Paid monthly leave and paid mensuration leave have been abolished, while incentive remuneration and differentiated payment of bonuses have been introduced with an aim to shift wage system into an annual salary system for all workers. The retrenchment has been combined with stepping up of work intensity: reduced staff level for all work and shortening of work duration for overhaul projects are the direct incidences of increased work intensity. This has been combined with other measures aimed at tightening the control and work stress: management innovation competition, quality improvement competition, various proposal system are also mechanisms that bring about greater work intensity.

Putting an end to the privatisation policy is not possible just by the efforts of workers at an individual workplace. In the same way, the effort to put an end to structural adjustment cannot be successful by confining the efforts within any given workplace. The society-wide response to privatis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has been, in the past, limited to building solidarity to prevent legislative measures. There has not been any serious effort to generate society-wide debate and solidarity to counter privatisation and there has not been much workplace-to-workplace solidarity to mount a united effort against workplace level structural adjustment. The various structures for organising effective response created around the Power, Gas, etc., have either become isolated or dissolved. While there is a growing public opinion calling for an end to privatisation, there is little joint effort on the part of the key actors who would have to lead the whole effort. The unions need to carefully develop genuine solidarity amongst the unions and social solidarity with various other social forces to counter the structural adjustment undertaken in preparation for privatisation and all the attacks on the welfare and rights of workers.